

65주년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맞아
2013년 인권의 날들을 기억하는

프로젝트 그날들

함께 만든 사람들

경계를 넘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국가인권위제자리찾기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금융공공성 쟁취 노조파괴 저지 골든브릿지 공동대책위원회, 녹색당 탈핵특별위원회,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빈곤사회연대,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법정책임연구회, 알바노조,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유엔인권옹호자 모임 한국NGO 모임, 이주노동조합 MTU,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 온다, 인권연구소 '장',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진화적학교+너머운동본부,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재단법인 인권재단사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강정마을,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집회시위 제대로 모임,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활동기상청 활기, 카페그, 콜트콜텍기타노동자와 함께하는 공동행동,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함께살자농성촌 주민들, 함께살자 희망지킴이, 해외 한국 성소수자 그리스도인 만남 준비단,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홀리스행동,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박근혜 당선,

‘두터운’ 인권과 ‘강한’ 민주주의의 과제 재확인

2012년 대선을 앞두고 한국사회의 당면한 과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는 정치를 누구나 원했다. 소외되고 배제된 이들의 인권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는 것과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의 첨예한 골을 해소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절박한 과제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근혜 후보의 당선으로, 이미 건넜다고 생각한 기본적인 인권의 과제조차 재도전과 재심사가 필요하게 됐다. 가장 형식적인 민주주의의 요소라 할 공정선거제도와 의회정치, 차별 없는 법의 지배조차 의심받게 됐으니 말이다. 이후 권력기관들의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선거개입의 증거들이 속속 드러났으나 집권 권력은 침묵과 회피로 일관했다. 정치는 멎었고 사적인 혐오감으로 공적 사안을 처리하는 인적 지배가 강화됐다. 법의 지배는 다른 의견과 대항정치를 겁박하는 데 활용됐다. 이런 상황에서 위기와 절망의 한계점을 드러낸 사건들이 이어졌다. 노동자들의 연이은 죽음은 그 가슴 아픈 사건 중 하나이다. 삶의 질 악화와 정치적 박해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인권운동은 저항을 더욱 버려야 할 것이다. 시민·정치적 권리와 경제·사회적 권리의 불가분성을 재확인하며, ‘반-박근혜’에 매몰된 저항이 아니라 불가분의 인권을 총체적으로 강화하는 ‘두터운’ 인권을 주창하고, 그에 당연히 동반되어야 하는 ‘강한’ 민주주의의 구현의 과제에 몰두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조 사수! 손해배상 철회! 최강서 열사의 외침

오전 8시 30분경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 최강서 조직차장이 사무실에서 목을 매고 자결하였다. 열사는 마지막 길에 “민주노조 사수하라 손해배상 철회하라 태어나 듣지도 보지도 못한 돈 158억”이라는 유서를 남겼다. 2011년 김진숙 지도위원의 309일간의 크레인 농성과 희망버스의 힘으로 만들어낸 사회적 합의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결국 한 명의 노동자는 죽음으로 내몰려야 했다. 두 달 넘게 지속된 열사 투쟁은 2월 23일 합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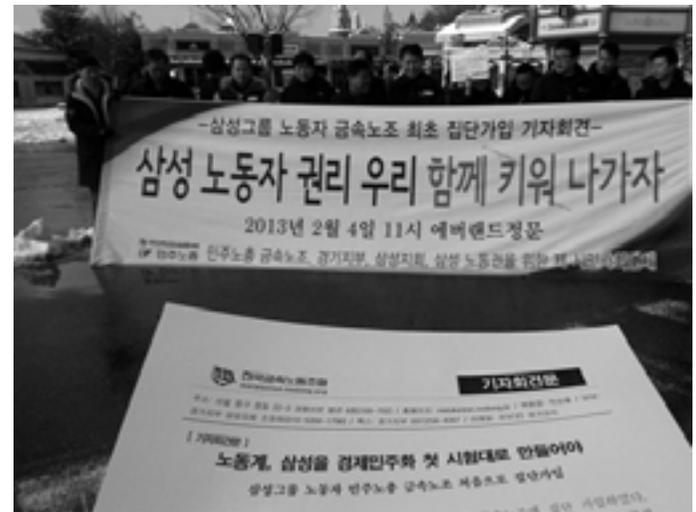
△최강서 열사 영정 ©참세상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동자 이운남 열사의 투신

이운남 열사는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창립발기인이자 첫 조직부장이었다. 노조설립 한 달 만에 부당해고를 당했고, 2012년 12월 22일 19층 아파트에서 몸을 던졌다. 이운남 열사의 영결식은 12월 26일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열렸다. 박근혜 당선 이후 연이은 노동자들의 죽음은 살아남은 자의 몫을 되물게 하는 무거운 질문이었다.

삼성그룹 노동자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처음으로 집단 가입

삼성그룹 노동자들이 최초로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집단 가입(1.14)하였다. 노조를 설립(2011.7.12)했지만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채 힘겹게 활동을 벌이다, 공개조합원으로 활동해온 조합원들이 1차적으로 금속노조에 가입하였으며 이후 상황에 따라 추가가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삼성그룹은 삼성노조의 설립시기(2011.7.18)에서부터 노조간부들을 차례로 징계해 왔다.(2011년 7월 조장희 부지회장 해고, 11월 김영태 회계감사 정직, 2012년 5월 박원우 지회장 징계, 7월 김영태 회계감사 폭행, 2013년 1월29일 백승진 사무장 정직 2개월 징계 등) 이러한 삼성의 무노조전략에 따라 삼성그룹의 노동자들은 불만이 있어도 그룹차원의 노조탄압 공포에 짓눌려 왔다. 삼성노동자들은 강력한 보호막을 필요로 했고 삼성지회는 현장 노동자들의 요청에 따라 민주노총의 핵심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에 가입하였다.



△삼성 노동자 권리 우리 함께 키워 나가자

한국산 최루탄, 바레인을 울린다

2011년 아랍의 봄 당시 바레인에서도 민주화 시위가 시작되었고, 바레인 왕정은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최루탄을 무차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최소 39명이 사망하고 수많은 사람이 부상당하는 등 인명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8살인 카심 하빔이 최루탄에 노출되어 사망(1.26)했다. 절망적인 것은 바레인에서 사용되는 최루탄을 가장 많이 공급하고 있는 곳이 한국 방산업체라는 사실이다. 한국 기업들은 지난 2년간 바레인에 150만 발의 최루탄을 수출했고, 한화 124억이 넘는 돈을 벌어들였다. 한국에서 현재 사용이 금지된 최루탄은 전 세계 곳곳으로 날개돋친 듯 팔려나가 그곳의 시위대를 탄압하는 데 쓰이고 있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생명을 위협하는 무기 수출을 허가하고 오히려 장려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인권단체 ‘바레인 워치’는 최루탄 수출을 중단하라는 국제 캠페인을 시작했고, 한국 단체들 역시 바레인뿐만 아니라 심각한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데 쓰이는 국가로의 최루탄 수출을 막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한국산 최루탄이 바레인을 울려서는 안 된다

기아자동차 노동자 윤주형의 슬픈 이름 비정규직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해고노동자였던 윤주형 동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1.28) 2010년 노동조합 지침에 따른 잔업거부로 해고되었던 윤주형 동지는 2012년 노사 교섭 과정에서 복직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년여의 기간동안 기아차지부와 금속노조에서는 신분보장기금이나 생계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윤주형 동지는 절망과 외로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냈다. 기아자동차 해복투는 “원직복직은… 우리가 최소한 해야 하는 명예회복이며 고인의 삶에 대한 예의”라며 투쟁했지만 투쟁의 불은 붙지 않았고, 장례는 미뤄져만 갔다. 고인에 대한 추모와 투쟁의 결기가 모아져야 했던 화성 중앙병원은 이대로 장례를 치룰 수 없다는 사람들과 장례를 강행하려는 사람들 간의 고성과 충돌이 끊이지 않았다. 장례식(2.7)이 치러질 때까지, 우리가 풀어나가지 못했던 과제가 오롯이 드러난 11일이었다.

‘콜트콜텍 기타노동자의 집’ 폭력 침탈

기타를 만들던 콜트-콜텍의 노동자들은 2007년 회사의 일방적인 공장폐업과 정리해고를 당했다. 법정투쟁과 송전탑 고공농성, 단식농성, 분사 점거농성, 6번의 해외 원정투쟁, 밴드 결성, 뮤지션과 함께 하는 콘서트, 불매운동 등 온갖 투쟁을 통해 자본의 가치보다 노동의 가치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려내고 있는 콜트-콜텍 기타노동자들은 2011년부터 부평 콜트악기 공장점거를 시작했고 이곳을 '콜트콜텍 기타노동자의 집'이라 부르며 이웃들과 삶을 살아갔다. 미술인들은 작업을 하고 전시를 했으며, 음악인들은 공연을 했고, 종교인들은 미사를 드렸다. 기계가 사라진 텅빈 공장은 함께 생활하고 창작하고 노동을 했던 이들과 함께 새로운 생명의 공간으로 변해갔다. 그러나 2013년 2월 1일 법원 집달관과 용역업체 직원 160여명에 의해 불법적으로 침탈되었고 기타노동자들을 사지가 들린 채 쫓겨났다. 침탈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경찰의 저지를 넘어서 다시 들어갔으나 (2.2) 결국 강제연행(2.5)되었다.

이후 공장은 무너지고 맞은 편에 천막을 친 기타노동자들의 투쟁은 2,500일을 맞이하고 있다. 기타노동자들은 기타가 사장의 탐욕을 채우는 이윤의 도구가 아니라, 자유와 삶을 노래하는 악기가 되길 원한다. 다시 공장으로 돌아가 삶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기타를 만들길 바라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재능교육 학습지 노동자, 202일간의 종탑농성

2월 6일 오전 9시경, 재능교육지부 여민희, 오수영 조합원이 대학로 혜화동 성당 약 30m 높이의 종탑에 올랐다. 그리고 8월 26일 오후 3시 두 노동자는 하얀 새 운동화를 신고 종탑에서 내려왔다. 재능투쟁 2076일, 종탑농성 202일만의 일이었다.

최종합의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사와 재능교육지부는 2008.10.31.자로 해지한 단체협약을 원상회복한다. 회사와 재능교육지부는 복귀 후 즉시 교섭을 시작하고, 2013.12.31.까지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 월회비정산 제도는 복귀 후 노사가 협의하여 합의서 체결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개선한다. (-)월 순증수 수료와 하절기지원금은 복귀 후, 우선 논의한다. ▷회사는 이지현을 포함한 해지교사 12명 전원을 즉시 복귀시킨다. ▷현 사태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고소·고발에 대해 합의서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호 처벌불원탄원서를 제출한다. ▷회사는 재능교육지부에 생활안정지원금 및 노사협력기금으로 2억 2천만 원을 지급한다.

대우조선해양 산재사망

2월 7일 대우조선해양 컨테이너선 위에서 선박건조작업을 하던 입사 1개월 차 사내하청 노동자가 20여 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1월에는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내 2도크에서 사내하청 노동자의 머리 위로 325톤짜리 선박 블록이 떨어졌다. 한 노동자는 즉사했고, 이 사고로 8명의 노동자가 심한 부상을 입었다.

대우조선해양은 작년 9천 여 명의 신규채용 중에 90%에 해당하는 8,200명을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로 고용했다. 하청노동자에게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제대로 된 장비를 지급하지 않아 살인을 방조하는 회사, 불과 몇 백만원의 벌금으로 살인에 대한 죄를 묻는 고용노동부. 더 이상의 '살인'을 막기 위해서는 죽음과 절망의 기업을 바꿔내기 위해서는 '기업살인법' 제정이 시급하다.



©참세상

씨앤엠 케이블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조합 결성

2월 13일 희망연대노동조합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가 창립총회를 열고, 2월 18일자로 공개활동에 돌입하였다. 이들은 수도권 최대 규모의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인 씨앤엠의 22개 협력업체에서 A/S·설치·철거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이다. 2011년부터 케이블비정규직노동자들은 정규직과 함께 노동조합을 준비했다. 씨앤엠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의 힘있는 투쟁은 케이블방송비정규직 티브로드지부의 조직화로 이어졌고, 동종업계 다른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을 불러일으켰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로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낸 희망연대노조 씨앤엠지부와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는 2013년 이용석 열사상을 받았다.

진주의료원 폐업,

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한 가슴아픈 싸움의 시작

홍준표 경상남도 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발표(2.26)했다. 폐업 발표는 어떠한 사회적 논의도 없이 갑작스레 이루어졌는데, 홍준표는 '진주의료원은 매년 40~60억원의 손실와 300억원의 부채로 파산 위기이며 막대한 도 재정을 더 이상 투입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며 폐업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폐업 발표는 역설적으로 공공의료와 건강권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폭넓게 논의되는 계기가 되었다. 홍준표가 주장했던 진주의료원의 손실 중 상당 부분은 가난한 환자, 장기치료 환자 등 수익 중심의 기존 의료체계에서 배제된 환자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음이 드러났고,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고 적절한 진료를 유도하는 공공병원의 지역적 역할이 논점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결의한 국정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는 여전히 폐업을 강행하고 있다. 공공의료와 관련해 제기된 여러 쟁점들이 지나가는 이슈로 끝나지 않아야 한다. 진주의료원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GM 닉 라일리 전 사장 700만원 벌금형 확정

대법원이 근로자파견법 위반으로 GM대우차(현 한국GM) 닉 라일리 전 사장에 7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2.28)했다. 현대차 울산공장 최병승 조합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정규직과 혼재근무를 했던 조립라인(의장라인)의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판단이었다면, 이번 GM대우에서는 자동차 생산라인 전체를 불법파견으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근로자 파견 관계로부터 해당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법파견으로 GM이 얻었을 부당이익은 수백억에 이른다. 대법원의 기대와는 달리 솜방망이 처벌로는 불법파견을 근절할 수 없다.

반도체 노동자 백혈병 피해, 첫 산재 인정

근로복지공단은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 결정(3.14)을 내렸다. 그동안 반도체 노동자의 암 및 중증질환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를 인정한 사례는 2건(삼성반도체 생산직 여성노동자의 재생불량성빈혈 승인(2012.4.), 유방암 사망 사건 승인(2012.12.))이 있었지만, 백혈병 산업재해 인정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만큼 의미있는 결정이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는 여전하다.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동안 고인과 유가족들의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으며, 업무관련성 평가 역시 시급히 개선되어야할 과제로 떠올랐다.

성기성형수술 없이 트랜스젠더의 성별 변경

트랜스젠더가 자신이 인식하는 성별로 법적 기록을 바꾸기 위해서는 현재 법원에 성별정정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법원이 만들어놓은 허가의 기준은 모든 트랜스젠더에게 과도한 의료적 조치를 일률적으로 요구하고 있어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3월 15일 서부지법은 5명의 트랜스젠더 남성(ftm)이 “성기 성형 수술은 너무 가혹한 요건이기 때문에 이 수술 없이 성별 정정 신청을 허가해달라”고 한 신청을 받아들였다. 전체적인 기준에서는 작은 부분이지만 가장 위험하고 비용이 높은 수술이었으며 건강을 침해할 가능성도 심대하게 높아 당사자에게는 실질적으로 성별 변경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했던 장벽 중 하나가 제거되었다. 더불어 서부지법은 비슷한 상황에 있던 30명의 트랜스젠더 남성의 성별 정정 신청을 허가(11.19)하면서 한국 최초로 허가의 이유를 밝혔다.

앞으로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 변경을 위한 조건은 본인이 인식하는 성별에 대한 확신이나 실제 생활 여부가 중심이 되어야 하며, 부모의 동의를 요구하거나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불허하는 요건도 시급하게 없애져야 할 것이다.

우리의 목소리로! 전국이주민활동가대회

한국사회에 이주노동자들이 들어온 것을 1990년대 초반부터라고 한다면 이주
의 역사는 20년이 넘어가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주체적인 투쟁으로 제도가 바
뀌어왔다. 특히 2012년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한 사업장변경제도 개악은 이주노
동자들의 큰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몇 차례 큰 집회와 이주공동체연대회의를 거
쳐서 2013년 전국이주민활동가대회(3.16)를 대전에서 치뤘다. 부산경남 미안
마 공동체, 신나는 연대(양산), 수원이주민센터 캄보디아 공동체, 부산김해 필리
핀 공동체 사피나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대구 성서노조 등 총
55명의 이주민활동가가 참여하였고, 전국의 이주민활동가들의 활동보고와 친
목도모, 이후 정부에 맞선 전국적인 연대 형성을 위한 토론들이 진행되었다. 앞
으로 한국땅에 사는 모든 이주민들이 국적, 피부색, 성별, 비자종류에 상관없이
단결하여 스스로의 노동권과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할 것을 결의
하는 자리였다.



△모든 이주민들의 단결과 투쟁을 결의한 활동가대회

긴급조치 1,2,9호에 대한 위헌결정

긴급조치 1호는 유신헌법 부정·반대·왜곡·비방행위 금지를, 2호는 긴급조치 위
반자를 처벌하는 비상근법회의를 설치하는 내용을 각각 담았다. 9호는 집회·시
위나 신문·방송 등으로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전 허가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집회·시위를 불허했다. 이러한 긴급조치들은 유신시대 인권을 짓밟
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 헌법재판
소 재판관 전원이 위헌이라고 판단(3.21)했다. 이후 당시 긴급조치 1·2·9호 위반
으로 경찰에 체포 등 인신 구속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국
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위헌 결정 이후부터 11월 17일 기준으로
121건에 달하고 있다.

과거 독재정권의 행위의 잘못을 국가기관이 인정한 것을 넘어서서 그 당시 피해
를 입었던 분들에 대한 배상까지도 가능하게 되어 역사의 후퇴를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파제가 생긴 셈이다.

노바티스 파소, 환자들의 승리

전 세계 환자들을 애타게 했던 7년간의 소송이 끝났다. 인도 대법원은 항암제 글리벡에 특허를 줄 수 없다고 판결(4.1)했다.

2001년 봄 글리벡이 출시되자 '기적의 약'이라 불렀고 백혈병환자들은 희망을 가졌다. 하지만 환자들은 '기적의 약'을 먹지 못했다. 한달 약값이 300만원이 넘었기 때문이다. 초국적 제약회사 노바티스의 특허권은 정작 약이 필요한 사람이 약을 먹을 수 없는 이유가 되었다. '세계의 약국'이라 불리는 인도에서는 글리벡이 출시된 1년 후 똑같은 약을 만들어 글리벡 약값의 1/10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했다. 노바티스가 특허를 신청하면서 인도의 암환자들의 싸움이 시작됐다. 이 소송은 초국적 제약회사의 특허권과 환자의 건강권이 대립되는 다양한 이슈들의 상징이었다. 인도산 제네릭을 먹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환자들 뿐 아니라 세계 각지의 보건의료단체, 에이즈운동단체, 지적재산권 관련 단체 등이 수년에 걸쳐 노바티스에 대한 항의시위와 국제적인 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전 세계 환자들과 활동가들이 벌인 연대투쟁의 승리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김학중 조직부장 분신

4월 16일 오후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사내하청노동자 김학중 조직부장이 온몸에 시너를 끼얹고 공장 안 천막농성장 앞에서 분신하였다. "내 자식에게 비정규직을 대물림할 수 없다!" "비정규직 철폐하라!" 많은 노동자들이 오가던 출퇴근 시간이었다. 김학중 조직부장이 분신한 날은 신규채용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일이었다. 기아차는 연령기준을 만 35세로 제한하였고, 그동안 비정규직 우선 채용을 요구해왔던 사내하청분회 조합원들 가운데 연차가 오래된 조합원들은 정규직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했다.

2013년 4.20 장애인차별철폐투쟁

장애인권운동은 매년 4월 장애인에 대한 동정과 시혜를 거부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끝장내기 위한 투쟁을 진행해왔다. 2013년은 ▲장애등급제와 부양의 무제 폐지 ▲장애인활동보조 24시간 보장 ▲발달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투쟁을 진행했다.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라나플라자 참사, 방글라데시 의류노동자들의 눈물

방글라데시 다카 외곽 사바르의 의류공장(라나 플라자) 붕괴 사건으로 노동자 1,127명이 숨지는 등 3,6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공장에는 제대로 된 안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참사는 예정된 인재나 마찬가지였다. 대참사로 방글라데시 의류산업 종사자들의 노동인권엔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다. 특히 방글라데시 의류산업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은 약 40달러(2010년 기준) 정도로 4인 가족 평균 생계비의 40%에도 못 미치는 급여였다. 방글라데시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동환경과 최저임금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현지 공장에 위탁생산을 맡긴 기업들의 인식 변화가 우선돼야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도 달라진 건 없다.

국제민주연대는 해외진출 한국 기업의 인권침해를 감시해왔다. 이번 화재로 인한 참사에 한국 기업이 직접적으로 연루된 것은 아니지만, 한국은 고용규모 기준 최대 섬유 의류산업 투자국이며 OEM 방식으로 현지 공장을 실제 운영하기 때문에 그 책임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통합당 김한길, 최원식 의원 차별금지법안 발의 철회

2013년 2월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민주통합당 김한길, 최원식 의원이 보수 기독교 및 차별금지법 반대 세력에 밀려 차별금지법안을 철회(4.24)하였다. 국회의원이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을 철회한 사건은 우리 사회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정당화하는 세력이 거대한 힘으로 등장했음을 알게 했다. 이후 반대세력은 지속적이고 노골적인 성소수자 혐오를 드러냈으며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더욱 적극적인 반차별활동을 진행하게 되었다.



△“해도 되는 차별 따윈 없다” 국회는 조속히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참세상

함께살자 농성촌 끝나지 않는 연대

2012 생명평화대행진이 제주도 강정을 출발했다. 쌍용차 노동자들의 전원복직, 강정 해군기지 백지화, 용산참사 진상규명, 핵발전 폐기 등을 요구하며 한 달 동안 전국 곳곳의 투쟁 현장을 돌았다. 이렇게 모인 힘으로 대한문에 '함께 살자! 농성촌'이 입주(2012.11.12)했다. 쌍용차 노동자들의 대한문 분향소가 기습적으로 강제철거(4.4)되면서 연대의 공간인 대한문을 되찾기 위해 '함께 살자! 농성촌' 집중 문화제가 4월 24일 열렸다. 농성촌은 대한문에서 사라졌지만, 각자의 현장인 동시에 우리 모두의 현장인 곳들에서, 쫓겨나고 내몰리는 사람들의 연대는 계속되면서 다양한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로의 아픔에 공명했던 쌍용차 노동자, 강정 주민, 용산 유가족, 밀양 주민들의 어우러짐은, 말로 하는 연대가 아니라 마음과 손발을 내미는 연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2012년 11월 함께살자 농성촌 입촌 기자회견

고 육우당 10주기 추모의 날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청소년 보호법상 동성애 차별조항의 삭제를 권고했다. 보수기독교 진영은 '국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며 동성애 혐오 공격을 하였고, 천주교 신자이자 동성애자인권연대 활동가인 육우당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로부터 10년 동안 성소수자 인권 운동은 청소년 성소수자의 권리를 위해 싸워왔고 2013년 더욱 짙어지는 동성애 혐오 조장에 맞서 추모 기도회, 대한문 추모 문화제를 열었다. 그리고 올해부터 육우당을 기리는 한국 최초의 청소년 성소수자 문학상인 '육우당 문학상'을 제정하여 뜻을 이어가고 있다.



△고 육우당 10주기 추모문화제

인권의 이름으로 사람이 지은 집, 인권중심사람 개관

인권과 인권을 열고 문턱이 없어 누구나 찾아오기 쉬운 공간을 만들기 위해 인권센터 설립운동이 출발(2010.10)했다. 정부와 기업의 도움없이 시민들의 십시일반으로 10억을 모아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어떻게 보면 무모해보일 수 있는 이 계획에 많은 사람들이 '과연 잘해낼 수 있을지' 생각했다. 하지만 큰 돈, 작은 돈 할 것 없이 형편껏 참여하는 주춧돌들이 하나 둘 모여 그 수가 3,000명이 되었다. 마포구 서교동에 세워진 인권중심 사람은 시민들과 인권활동가들의 '놀터'이고 인권활동을 엮는 '이음터'이자 인권활동을 더 크게 만드는 '힘터'이다.



△시민들의 힘으로 인권중심 사람이 열리다

기륭전자분회 복직, 그리고 다시 투쟁으로

1895일, 앞이 보이지 않는 싸움을 버텨가며 해나갈 수 있었던 힘은 조합원들의 헌신과 사회적 연대에 있었다. 2013년 5월 1일, 기륭의 노동자들은 8년간 간절히 바라왔던 일터로 복귀했다. 노동자들은 매일 아침 9시 정각에 출근하고, 회의실에서 업무대기를 했다. 행여나 조퇴를 해야 할 때에도 관리자에게 허락을 받았고, 언제 다시 생산라인에서 일을 할 수 있을지 학수고대 해왔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회사가 어렵다며 생산라인 가동을 차일피일 미뤘다. 직원으로 볼 수 없다는 막말을 하면서 4대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임금지급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기륭은 다시 또 기약할 수 없는 싸움을 시작하고 있다.



△기륭전자분회 조합원 10명이 5월 2일, 약 8년 5개월 끝에 현장으로 돌아갔다. ©참세상

한국 인권옹호자 실태보고대회

한국의 인권옹호자들은 집시법이나 국가보안법 외에도 수많은 법률로 인해 인권옹호활동을 탄압받고 있다. 올해는 특히 제주 강정, 울산 현대차 비정규직, 밀양 송전탑 반대 투쟁 등 전국 곳곳에 있는 농성장에서 인권옹호자들이 물리적 폭력과 법에 의한 처벌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이를 국제사회와 국내에 알리고 모으는 자리로 실태조사보고대회를 열었다. 마가릿 세카자 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의 방한(5.29)에 맞춰 한국 상황을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29개 인권단체들이 함께 준비했으며, 특별보고관과 밀양, 울산, 강정 등의 현장을 직접 찾아갔다. 특별보고관은 출국 전 간단한 결과 브리핑(6.7)을 했으며 2014년 3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공식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죽음의 공장, 현대제철

현대제철 충남 당진공장에서 아르곤 가스 누출로 5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고로 3기 공사기한이 3개월 이상 단축되면서 과도한 작업들이 이어졌고, 2012년 9월부터 죽음의 행렬이 이어졌다. 현대제철의 막무가내 건설 강행을 중단시키고, 종합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할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이 채 끝나기도 전 작업중지 명령을 풀었고, 3전로의 재가동을 허락했다. 6개월 후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고로가스(용광로 가스) 누출 사고가 다시 벌어져(11.26), 9명이 중상을 입었고 이 중 1명이 사망했다. 노동부도 방관하는 죽음의 공장, 절망의 공장 현대제철. 죽음의 공장을 바꾸는 것은 노동조합의 힘으로, 노동자들의 단결로만 가능하다. 그리고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는 노사협약서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측에 맞서 투쟁중이다.

대법원의 부부강간죄 인정, 폭력과 인권의 재구성

대법원은 부부 사이의 강제적 성관계를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5.16)을 내림으로써 ‘부부강간죄’에 대해 처음으로 유죄를 인정했다.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1997)된 이후 16년만의 결과이다. 그동안 대부분의 부부강간 사건이 성폭력이 아닌 폭행, 협박 등의 행위로만 처벌되어 왔다는 사실은 여성들이 경험하는 폭력의 가해자들이 대부분 남편, 파트너, 가족구성원 등 이른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현실을 가려왔으며, 피해당사자 여성을 비롯해 가해자, 사회구성원 모두가 여성 인권의 문제를 ‘개인적인 일’로 인식하도록 하는데 기여해왔다. 부부강간죄의 인정은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확대한다는 차원뿐만 아니라, ‘폭력’의 정의와 ‘인권’의 범주 밖에 있었던 여성들의 경험을 통해 인권의 개념을 재구성해야 필요성을 역설한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사적 영역’, ‘안전한 공간’, ‘편안한 관계’라고 여겨왔던 ‘가족’이 가장 ‘폭력’과 가까울 수 있음을 성찰해야 한다는 사실도 보여준다.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IDAHO Day)

1990년 5월 17일 국제보건기구는 동성애가 질병이 아님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이 날을 기념하는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 한국의 성소수자들은 동성애 혐오, 성소수자 차별에 맞서 대한문 그리고 청계광장에서 혐오를 중단할 것을 외쳤다.



△청계광장에서 울려 퍼진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목소리

대한문에 울려 퍼진 '꽃보다 집회!', '집회시위 제대로!'

대한문 쌍용차 노동자들의 농성천막이 불에 탄 후(3.3), 중구청은 농성천막이 있던 자리에 화단을 조성했다. 쌍용차 노동자들의 낯을 위로하는 분향소가 설치(2012.4.5)된 후, 대한문은 억압받고 소외당한 이들이 모여 서로를 위로하고 연대하며 투쟁하는 장소로 거듭나고 있었다. 대한문에서 열리는 여러 집회들, 문화제로 사람들은 모였고, 그 앞을 지나가는 이들도 자연스럽게 함께 했다. 정부는 그게 두려웠을 것이다. 경찰은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면서 화단 주변을 지키기 시작했다. 더 나아가 집회 때 사용할 물품을 일일이 체크하고, 경찰이 집회를 허가하고 금지하기 시작했다.

이를 두고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이 5월 29일 대한문 앞에 모였다. 집회 이름은 '꽃보다 집회'. 모이고 연대하고 투쟁할 권리는 이렇게 모이고 싸우는 우리에게 이미 있음을 선언했다. 경찰과 권력에 의해 관리되는 집회시위가 아닌 '집회 시위 제대로!'를 외쳤다. 그 날 화단경비를 핑계로 집회 장소에 난입한 경찰들에게 집회 방해 행위임을 분명히 고지하면서 신원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집회 장소에서 밀어내기 위한 신나는 싸움을 벌였다. 그 날 이후 '집회 시위 제대로' 모임은 또 다른 모의를 계속하고 있다.

골든브릿지 5.31 주주총회 투쟁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가 지났던 파업 투쟁을 종료(11.29)하고 조합원들은 현장으로 복귀했다. 임단협 쟁취 민주노조 사수를 위해 파업에 돌입(2012.4.23)한 지 586일만이다. 2005년 이상준 회장은 노조와 공동경영약정을 통해 회사를 인수했으나 노조가 회사의 탈법적 운영과 사금고화에 걸림돌이 되자 단협을 해지하며 노조를 탄압했다. 노조는 파업 과정에서 회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를 고발했고,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유상감자 승인으로 300억 원을 빼내가려고 시도했다. 5.30~31 진행된 1박2일 주총투쟁에서 조합원과 연대 단위는 한마음이 되어 밤을 새웠다. 회사가 120여명의 용역과 경찰의 비호 아래 안건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지만 조합과 골든브릿지 공대위(4.10 발족)는 주주총회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골든브릿지 지부 투쟁은 금융권 사무직 노동자들이 단결, 단체협상, 단체행동의 권리를 지켜내는 파업이었으며 다양한 단위와 함께 금융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연대한 의미 있는 투쟁이었다.

NSA 전세계 도청 폭로

내부고발자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 정보기관 NSA의 전세계 통신과 인터넷 감시 실태를 폭로했다. 이 사건 이후 오히려 권한 확대를 주장하는 각국 정보기관들에 맞서, 세계 인권시민사회는 정보기관의 올바른 통제를 위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국정원의 선거개입 문제가 불거지는 한국에서도 단편적인 대책을 넘어서서 인권 원칙에 따라 정보기관을 개편해야 할 과제가 있다.

쌍용차 해고자 자동차를 만든다 H-20000 프로젝트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의 투쟁을 응원하는 희망지킴이는 보다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쌍용자동차 사태에 대한 현 정부의 국정조사 이행 약속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4개월 동안 약 1천4백여명이 참여하여 7천만 원이 넘는 기금을 모았다. 중고 코란도를 구입하여 해고자들이 직접 분해하고 새로 조립한 뒤에 거기에 이윤업 화가의 예쁜 그림을 입혀서 아트카로 탄생시켰다. 서울광장에서 해고노동자들이 만든 차를 시민들에게 선보이고, 사연공모를 받아서 당첨된 노래패 꽃다지에 이 차를 기증하는 행사(6.7)도 가졌다. 이 과정을 통해서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은 작업복을 입고 공구를 쥐고 자동차를 조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해고자들이 공장으로 돌아가는 날을 앞당겨야 한다는 여론을 만드는 데도 기여했다. 이때 모인 기금은 쌍용차 해고자들의 생계비 지원과 20여개 장기투쟁 사업장의 투쟁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전달되었다.

쌍용자동차 김정우 지부장 구속

6월 10일 오전 8시경 중구청 직원들과 남대문경찰서 경찰들이 쌍용차희생자 대한문 분향소를 또 다시 침탈했다. 4월 대한문 분향소 천막 강제철거와 화단 설치 후, 쌍용차 해고노동자들과 쌍차범대위는 대한문에 비닐천막으로 분향소를 만들어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경찰과 중구청은 이마저 강제철거했다. 그리고 24명의 정리해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분향소를 짓밟는 데 대해 항의하는 김정우 지부장을 연행하여 구속했다. 검찰은 김정우 지부장에 대해 수많은 범죄혐의를 뒤집어 씌웠고, 6개월 간의 재판 끝에 법원은 실형을 선고(12.2)했다.

2009년 3천여 명의 노동자들을 길바닥으로 내쫓은 쌍용차 정리해고는 회계조작, 기획부도, 경찰폭력이 합작한 노동자 대량학살 사건으로 사회화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대선 직후 쌍용차 국정조사를 약속했다. 그러나 취임 100일도 안되어 그 약속을 파기하고 대한문 분향소를 강제철거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다. 후보 시절 전태일 열사 동상을 찾은 뻔뻔한 행동을 은뎀으로 막아선 김정우 지부장에 대한 원한 때문일까? 김정우 지부장은 집행유예 1년을 포함하여 총 1년 10개월의 옥고를 치러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또한 법원은 해고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손배판결까지 하여 정리해고에 이은 또 한번의 살인적 만행을 저질렀다. 김정우 지부장 구속은 자본과 정권의 비인간적 본질을 그야말로 바닥까지 드러낸 대표적 반인권 행위이다.

검찰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기소

지난 대선시기 국정원 등 국가기관이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있었다. 이는 간접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평가되게 만드는 기본 요소인 '선거 시기 자유로운 선택'을 훼손한 것으로 민주주의를 유린한 행위이다. 이런 행위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지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었으나, 검찰은 이날 경찰과는 달리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하였다. 이 기소는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사건의 실체가 밝혀지는 시발점이 된다.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범국민 촛불대회 ©참세상

평등예감 '일'들의 이어말하기가 시작되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차별을 정당화하는 세력에 맞서 평등의 감각을 나누며 함께 연대하는 행동을 모색하는 '평등예감: '일'들의 이어말하기'를 기획하였다. 차별금지사유로 환원되지 않는 살아 숨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차별'이라는 열쇠말을 통해 연결되기 시작했다. 첫번째 "숨겨지는 사람들의 커밍아웃"(6.18)을 시작으로 모두 아홉 차례에 걸쳐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대한문 앞에서 열렸다. 특히 일곱번째 이어말하기부터는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와 함께 노동과 차별을 연결하기 시작하며 더욱더 너른 연대와 평등을 예감하기 시작하였다. 이어말하기의 이야기손님들은 차별에 맞선 행동을 제안하는 반차별선언을 제안했고 12월 10일 '모여말하다'가 진행될 예정이다.



△쏟아지는 비에도 가라앉지 않았던 첫번째 이어말하기의 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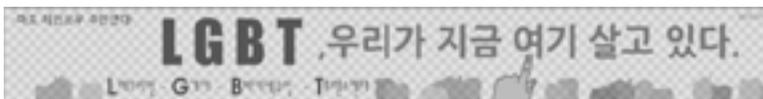
마포구청 성소수자 현수막 게시에 대한 시정 권고

성소수자 현수막 게시를 거부한 마포구청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 권고를 내렸다. 국가인권위는 마포구청장에게 “관할하고 있는 옥외광고물의 게시에 있어, 광고물의 내용이 성소수자와 관련된 것임을 이유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과 업무와 관련된 직원들에 대하여, ‘성소수자 차별금지’의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마포구는 이후 시정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행동이 흥대 걷고싶은 거리에서 개최하려던 커밍아웃 파티에 대해 불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역사회에서 성소수자의 존재를 부정하고 배제하려는 지자체 행정의 문제가 불거진 이번 사건은, 차별에 맞서는 행동이 지역사회에서 폭넓게 펼쳐져야 할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2011년 9월부터 전북교육청이 2차례에 걸쳐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안을 상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교육위원들의 반대로 모두 부결되었다. 2013년 1월에는 후퇴된 내용의 도의원 발의 학생인권조례안이 상정되어 자칫 이름뿐인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될 뻔 했다. 이에 전국의 청소년활동가들이 도의회 교육위원회를 점거하고 지역사회 및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의 항의가 이어지면서 의원 발의안은 부결되었다. 2013년 6월, 일부 부족하지만 학생인권 보장의 취지를 살린 도의원 발의의 학생인권조례안이 상정되었다. 하지만 교육위원들의 반대로 부결되어 조례 제정이 또다시 무산될 뻔하기도 했다. 다행스럽게도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제69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1항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되어, 경기도, 광주,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네번째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6.25), 공포(7.12)되었다.

학생인권조례를 번번히 거부하는 지방의회에 맞서, 여러 쟁점들을 학생인권의 원칙으로 정면 돌파해 열매를 거둔 뜻깊은 날이다.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가 게시하려했던 현수막

유일한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입법청원 제출

군형법 제92조의6은 강제성 없는 남성 군인 간 성적 행위를 징역형으로 규율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소수자 차별 법안으로,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 2012년 UN 국가별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서도 폐지를 검토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2013년 군형법이 개정(4.5)되기는 하였지만 남성 간 성행위를 비하하는 '계간(鷄姦)'이라는 용어가 '항문성교'로 대체되었을 뿐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관계를 범죄화하고 있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존재만으로도 '잠재적인 성추행범'으로 오인받고 차별의 사각지대에서 온갖 모욕을 감내해가며 군복무를 하고 있는 동성애자 군인들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폐지되어야 한다. 이에 입법청원 운동이 시작(5.16)되어 김조광수, 박래군, 백미순 외 총 5,687명이 군형법 92조 6 폐지에 서명하였고 국회에 제출(6.26)되었다. 국회는 수많은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군형법 92조의 6을 폐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소수자의 인권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건설노조 파업으로 정취한 권리

건설노조는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과 산재보험 적용, 건설현장 투명화, 체불방지를 위한 임금.임대료 지급확인제도 법제화, 퇴직공제제도 적용 대상 확대 및 공제부금 현실화 등을 정부에 요구하며 건설노조가 파업에 들어갔다.(6.27)

파업 하루 만에 건설노조는 대정부 교섭에서 정부가 제안한 대책을 받아들였다. 정부는 국토부 산하 4대 공기업에 대금지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건설기능인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 및 지원 방안 법제화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법제화할 것, 관리 부실 문제가 제기된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로 편입해 관리할 것, 공공건설현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 등의 방침을 내놨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퇴직공제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5개년 계획에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도입을 포함키로 했다. 아울러 건설현장 재해에 대해 원청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건설노조에 제안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무노조 삼성공화국에 내리는 도전장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창립총회(7.14)를 열었다. 삼성에 집단적으로 노동조합의 깃발을 세운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특히 삼성전자서비스는 불법파견, 위장도급 의혹을 받고 있으며,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과 근로기준법도 적용되지 않는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있었다. 하지만 수시근로감독은 삼성의 입김에 의해 무력하게 끝났다. 노동부는 불법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에게 조사대상을 고르라고 선택권을 줬고, 고위관계자의 입김의 작용을 통해 조사방향이 달라졌다는 근로감독관의 녹취파일이 공개되었다. '삼성공화국'의 강대한 힘을 확인할 수 있었던 수시근로감독이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동자들은 삼성에 맞서는 쉽지 않은 투쟁을 하고 있지만 최종범 열사(10.30) 투쟁을 기점으로 더욱 굳세게 단결하고 있다.



△삼성 무노조 경영에 반격,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 ©참세상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박정식의 죽음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박정식은 10년 동안 소나타를 만들었다.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 아니 정규직보다 더 힘들게 일하면서. 정규직의 절반도 되지 않는 임금을 받으면서도 언젠가는 정규직이 될 것이라고 믿고 견뎌왔지만 정규직으로 향한 길은 없었다. 현대차 사내하청은 정규직이라는 대법원 판결(2010.7.22) 기사를 보고 그는 7년 만에 노동조합 문을 두드렸다. 제아무리 재벌이라고 해도 대법원 판결은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3년이 지나도, 비정규직 노동자가 철탑 위에 올라 300일 가까이 절규해도 현대차는 변하지 않았다. 불법파견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직접고용을 명령하겠다는 박근혜 정권은 10년 동안 불법을 저질러온 정몽구 회장 대신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경찰서로 끌고 갔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목을 뗐다.



△현대차 박정식 열사여, 비정규직 없는 세상으로 가소서 ©미디어총청

울산 현대자동차로 향한 희망버스

천의봉, 최병승. 두 명의 노동자가 송전철탑에 290일을 넘게 있었다. 유서 한 장 없이 죽어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숫자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정규직 전환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어디서 비정규직 죽음의 열차에 뛰어들지 모른다. 끔찍한 비정규직 죽음의 열차가 지금도 우리 곁을 지나가고 있다. 송전철탑 농성 296일이라는 세계에도 유례없는 극한의 투쟁을 벌인 후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는데도 성과 없이 내려온 자신이 야속했다고 말하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착취해 10년 동안 재산을 10배나 불린 정몽구 회장은 사내하청 노동자가 얼마나 더 죽어야 대법원 판결을 따를 것인가. 모두의 마음, 모두의 분노를 담아 7월 20일과 8월 31일, 희망버스가 울산으로 향했다.



△울산현대차 철탑농성자 천의봉, 최병승 ©울산저널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학교폭력, 학교책임 없다는 대법원 판결

2009년 11월 30일, 당시 남자고등학교를 다니던 청소년 성소수자가 집단괴롭힘, 학교폭력에 시달리다가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2013년 대법원은 괴롭힘의 정도가 중대하지 않다며, 학교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7.26)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은 학교폭력에 처해진 소수자학생의 취약성, 그 심각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한국사회가 여전히 그의 고통, 절망, 죽음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은 더 큰 비극이며 안타까운 현실이다.

수용자를 위한 감옥법령집 발간

교도소·구치소 등 감옥 수용자들의 처우를 규정하는 법령이 담겨 있는 ‘수용자를 위한 감옥법령집’이 발간되었다. 법령집에는 최신 개정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수용자의 처우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시행령·훈령·예규 등 모두 46건의 법령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정보공개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고소·고발 △국가배상청구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권리구제 제도에 대한 설명을 함께 수록했다. 법령집은 수용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가이드이자,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교도관의 근무환경 개선에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해군기지를 포위하는 평화의 인간띠잇기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제주도내에서 '2013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이 열렸다. 제주도민은 물론, 전국에서 평화를 염원하는 많은 이들이 강정마을에서 제주시까지 함께 걸으며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를 외쳤다. 대행진의 마지막 날인 8월 4일에는 다시 출발지였던 강정마을로 돌아와 참가자들이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둘러싸는 인간띠잇기 행사로 마무리했다. 2013년 해군기지 공사 예산이 통과되었고, 환경과 마을공동체를 파괴해가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싸움은 끝나지 않았음을 인간띠로 마음을 모으고 알리는 자리였다.



△강정포구 인간띠잇기 현장

책임도, 비난도, 처벌도 여성만의 몫인가

의정부지방법원은 "낙태행위는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이유로, 가정 폭력에 시달리다 낙태 시술한 여성에게 벌금형(8.9) 200만 원을 내리면서 남성의 '낙태방조죄'에 무죄를 선고했다. 결혼 후 얼마 되지 않아 시작된 남편의 음주와 폭력, 경제적인 어려움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임신중지를 선택한 여성은 남편에게 갈로 위협까지 당했는데도 재판부는 여성을 고소한 남성의 입장만을 받아들였다. 임신중지에 대해 여성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한국사회의 무책임하고 가부장적인 현실에 여성의 삶을 어떻게 위협하고 있는지를 명백히 보여준 판결이다.

이 사건을 지원했던 한국여성민우회는 올해 접수된 '낙태' 관련 10건의 상담 중 8건이 "낙태죄로 고발하겠다"는 파트너 남성에 의한 협박에 대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프로라이프 단체들에 의해 촉발된 낙태 시술에 대한 고소/고발 증가, 모자 보건법상의 최소한의 낙태 허용 규정에서조차 '배우자 동의'를 의무로 명시하고 있는 현행법은 이런 현실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임신중지를 '태아를 죽이는 여성의 이기적인 행위'로만 몰아가고 여성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현실은, 오히려 생명과 삶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성찰과 책임을 삭제하고 여성들의 건강과 생명, 사회적 삶을 위협하는 결과로 돌아올 것이다.

박정근 국가보안법 무죄

트위터에 북한의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의 내용을 리트윗 하였던 박정근 씨가 국가보안법 7조 1항과 5항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되었다

광화문농성 1년,

사람의 온도 36.5°가 모여 투쟁의 365일을 만든다!

한국에서 장애인이 복지에 접근하려면, 장애등급을 잘(?) 받아야 하고, 가족이 가난해야 한다. 게다가 장애등급은 그 자체로 낙인이다. 예산의 논리로 장애인의 권리를 잘라내는 것일 뿐 아니라, 장애를 의료적인 '기능손상'으로 인식하는 차별의 논리를 재생산하기 때문이다.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요구 광화문농성'을 시작(2012.8.21)했다. 녀 달쯤 지났을 때, 집 내부 화재로 장애인운동가 故 김주영동지가 사망(2012.10.26)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수많은 장애인이 홀로 남겨진 시간에 죽어갔다. 활동보조가 24시간 보장되어야 한다는 요구에 예산부족이라는 변명만 늘어놓는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 국회 정론관에서 18시간 점거농성(2012.12.2)이 진행됐다. 농성 200일이 되는 날(2013.3.8)에는 '박근혜 복지, 땀이야?'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1년을 맞은 8월 24일에는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열었다. 싸우는 이들의 맞잡은 손으로 차별을 멈추기 위해 쌍용차 해고자와 장애인, 가난한 이들이 함께 연대와 투쟁을 결의했다. 복지가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당연한 요구가 우리 모두의 요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능교육 노동자의 끝나지 않는 싸움

종탑농성은 끝났고, 조합원들은 재능투쟁이 승리하였다며 현장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유명자, 박경선, 강종숙 3인의 노동자는 시청 환구단에서 농성을 이어갔다. 이들은 재능 투쟁의 핵심은 해고자 복직투쟁이 아닌 단체협약 원상회복 투쟁이었으며, 종탑 투쟁으로 합의한 내용에는 단체협약 원상회복의 핵심적인 부분이 빠져 있다고 이야기한다. 재능투쟁이 끝나지 않았으며,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끝나지 않은 투쟁은 2,200일을 향해가며 재능교육 노동자들을 다시 6번째 겨울로 몰아넣고 있다.

국정원의 소위 '내란음모' 사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실 등 18곳이 압수수색당하고,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을 체포당했다. 국가정보원 경기지부, 수원지검 공안부의 지휘 아래 이루어진 압수수색과 체포는,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대한 증거와 정황들이 드러나는 과정에서 터뜨린 사건으로, 특히 수원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오던 현직 통합진보당 당원의 제보를 근거로 각종 회합 녹취 등 '프락치' 논란이 더해지기도 했다.

'내란음모 사건'이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으리라는 예상은 맞았다. 내란음모 사건 이후 조성된 공안정국의 모든 진원지는 국정원이 되었다. 실제 박근혜 정부 들어 주요한 소식들은 모두 국정원에서 출발하고 있었다. 대통령 선거의 불법 개입과 NLL논란, 소위 '내란음모' 사건, 심지어 채동욱 검찰총장 사의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에서조차 강한 의구심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사건들은 모두 특정 개인, 혹은 집단에 대한 '낙인찍기'를 통하여 사회 전체에 공포와 혐오를 확산시키는 데 일조한 사건들이었다. 한국사회는 비밀정보기관의 공안정치에 의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뿌리째 위협받고 있다.

사건 당사자들의 피의사실공포, 가족들에 대한 혐오행동,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불법도감청, 국정원에 의한 인권유린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음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메카시즘 광풍이 몰아쳤다. 서로 의견이 다른 친구를 국정원에 고발하거나 대학강사가 고발당했다. 사회전체적으로는 의견을 달리하는 집단에 대해 일방적인 증북딱지를 붙이는 것이 용인되었다. 2013년 한국사회 메카시즘은 소위 '내란음모' 사건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공포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간접고용과 감정노동,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의 소중한 승리

서울시 다산콜센터 노동조합과 위탁업체는 9월 2일 새벽 ▷기본급 3% 인상과 기존 조정수당 보전 ▷추석 상여금 5만원 인상 ▷노조 간부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노조 운영위원회 활동시간 일부 유급 인정 등에 합의했다. 다산콜센터에 노동조합(2012.9.)이 만들어진지 1년 여만에 얻은 성과다. 서울의 얼굴이라고 하지만 서울시 소속이 아닌, 서울시의 민원행정업무를 수행하지만 위탁업체 소속의 '간접고용 노동자'인 다산콜센터 노동자. 간접고용과 감정노동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은 2014년 직접고용을 쟁취할 수 있을까.

불법파견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03년부터 원자력연구원 하나로 내 핵연료생산, 반도체 생산, 방사선측정기기 교정, 하나로 성능관리 등의 주요 업무에 100여명의 하청노동자를 사용해왔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파견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7.26)을 내려 8월 23일까지 73명을 직접고용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시정명령을 거부했고, 대전지방노동청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 1차로 5억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9.3)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법을 집행해야 할 정부 기관에서 처음으로 불법파견이 확인됐고, 직접고용 명령이 내려졌으며, 과태료까지 부과된 곳이다. 73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여부는 박근혜 정부 비정규직 공약의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김승환-김조광수 동성 결혼식 및 동성애혐오 반대 캠페인

9월 7일 김승환 김조광수 커플의 결혼식이 많은 사람들의 축하와 지지 속에 공개적으로 열렸다. 10여 년 전부터 성소수자들이 한국사회에서 공개 결혼식을 올리고 언론을 통해 동성 커플의 모습을 드러내왔다. 동성에 혐오 공격이 어느 해보다 두드러진 2013년 이들의 결혼은, 동성 결혼과 가족구성권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동성결합을 포함한 시민결합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국가는 점점 많아지고 있다. 성소수자 가족구성권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평등하게 결합할 권리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혼인한 이성애 가족에게만 보장되던 사회경제적 권리의 평등을 이루기 위한 과제이기도 하다. 이날 호모포비아의 오물 투척이 있기도 했지만, 성소수자들의 자긍심이 더없이 빛난 날이기도 했다.



△결혼식이 열린 청계천 인근에 축 늘어진 현수막들

교직원공제회콜센터 '해고자 직접고용 정책 추진 문화제'

교직원공제회콜센터 노동조합 현희숙 부지부장은 콜센터에서 일한지 13년이 되었다. 처음 일할 때만 해도 직접고용이었으나 '한국고용정보'라는 위탁업체가 들어오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노동자들이 위탁업체 소속이 되고 나서는 해고가 훨씬 쉬워졌다. 고객 민원도 무조건 상담원이 책임지고, 화장실도 마음대로 갈 수 없게 되었다. 현희숙 부지부장은 상담원으로 같이 근무했던 위탁업체 사장의 처제가 온갖 특혜를 다 받는 것에 문제제기를 했다가 해고가 되었다. 서울지방 노동위에서는 노동자라고 판결하였으나 중앙노동위는 '위촉계약서'에 사인했다는 이유로 노동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특수고용이라는 이유였다. 그리고 거리로 나오지 1년 쯤이다.

국립오페라합창단, 거리에서 공연으로 투쟁하다

매주 목요일 점심시간이면 혜화동 문광부 앞에서 집중집회를 여는 국립오페라합창단지부, 가을을 맞아 특별히 준비한 공연 집회가 열렸다. 공공운수노조의 투쟁버스가 도착하고 백여 명의 동지들이 함께 하자 거리의 예술노동자들은 간만에 힘이 났다.

국립오페라합창단은 국립오페라단의 공연에서 연기와 합창을 전문적으로 소화할 단원의 필요성으로 창단(2002)됐지만, 이후 상임화 약속은 아랑곳없이 이명박 정권 당시 유인촌 장관의 정치적 인사 개편(2009.1)으로 공중분해 되었다. 6개월의 투쟁 끝에 문광부의 '3년 이내 상임화' 약속을 믿고 무대로 돌아갔지만, 복귀한 일터는 불합리한 처우와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점철된 노동부 일자리창출사업이었다. 결국 노동자들은 더 큰 상처를 안고 다시 거리로 내몰렸다. 예술계도 예외가 아닌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현실을 폭로하며 투쟁해 온 노동자들의 요구에 답해야 할 문광부는 세종시로 이전(12.13)한다. 하지만 노래의 꿈과 노동의 권리가 만나는 무대를 향한 국립오페라합창단지부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정치활동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무죄

사회주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중요한 판결이 내려졌다. 해방연대가 국가보안법 재판에서 무죄판결 받았다. 재판부 판단의 무죄 근거는, 국가변란은 폭력적 방법으로 기존 정권을 새로운 정권으로 바꾸는 것이라는 대법원의 국가변란 규정과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법리였다. 재판부는 전체 내용을 고찰해본 결과 해방연대가 폭력혁명, 국가변란을 조직했다고 볼 수 없기에 국가보안법 7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파란만장했던 6년의 발걸음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백서 발간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청소년인권운동 내부의 일상적 소통강화 △청소년인권운동의 전략 마련과 현안 대응 △청소년 인권활동가 역량 강화를 위한 배움터 개설과 연구 작업 △민간 청소년인권운동 진영의 형성 등을 일구어 내는 것을 목표로 창설했다.(2006. 3.19) 학생들의 학내 시위를 지원하는 스쿨 어택 등 학생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꾸준히 했고, 청소년 활동가 발굴과 입문 등을 목표로 한 청소년인권캠프 및 교육 사업, 청소년인권운동의 역사를 정리하는 연구 사업, 청소년인권운동의 경계 넘기를 시도하기 위한 10대 여성주의 및 청소년 노동 관련 사업 등을 진행했다. 청소년활동가들을 위한 재정적, 교육적, 이론적 뒷받침 역할을 수행할 조직의 결성 필요성이 새로이 대두되면서 '청소년활동기상청 활기'로 통합/전환을 결정했다.(2012.3) 네트워크가 남긴 유산을 정리하고, 현재와 미래의 청소년활동가들의 운동에 보탬이 되고자 전5권, 2800여 쪽에 달하는 백서를 발간했다.

삼성노동인권지킴이가 달려간다

한국사회는 삼성왕국이다. 삼성은 일류라는 이름 아래 정치와 경제, 법조계와 언론까지 모든 사회의 정상적 기능을 마비시켰다. 탈법과 비리, 인권유린과 환경파괴의 책임을 면제받는 삼성에 의해 대한민국은 적자생존의 밀림이 되어왔다. 소위 무노조경영이라는 반헌법적 기조는 삼성 내부의 민주적 기능도 상실시켜왔다. 비판의 실증은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토대를 무너뜨렸고 노동자들을 무권리 상태로 만들었으며 삼성의 인권유린은 국경을 넘어 프랑스, 브라질, 베트남으로 가고 있다. 노조협회를 전제로 한 기업경영을 더 이상 두고 봐서는 안 되겠다고 뜻을 모은 삼성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 지킴이들이 첫 만남을 가졌다.(9.28) 그 결실로 삼성을 겨냥한 최초의 노동인권단체 '삼성노동인권지킴이'가 결성되었고 발족(12.10)을 앞두고 있다. 삼성을 바꾸고 삶을 바꾸기 위한 삼바운동이 시작된다.



△삼성을 바꾸고 삶을 바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티브로드 노동자, 진짜 사용자와 만나다

국내 1위 케이블방송 기업인 '티브로드'의 외주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3.24)했다. 노동부 근로감독의 결과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을 무더기로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고, 노동자들은 노조결성 이후에도 악질적인 부당노동행위, 살인적인 노동조건에 시달렸다. 이에 티브로드지부는 전면파업에 들어갔고(9.4), 전면파업 27일 차인 9월 30일에는 원청 책임자성 인정과 성실교섭을 촉구하며 광화문 흥국생명 본사에 위치한 (주)티브로드 홀딩스 사무실 면담투쟁을 진행했다. 면담투쟁의 성과로 지부와 사측은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집중교섭을 전개하였고, 집중교섭 결과 임금인상, 조합원 신분 및 고용보장, 복리후생, 노동조합활동보장 등을 따내 현장에서 복귀했다.



©참세상

학생인권권의 여전한 목마름이 확인된 그날

가장 인권적인 것이 가장 교육적이다라는 가치를 내건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이 올해로 5년째를 맞이했다. 전국 곳곳 학생인권조례운동본부들의 결합체라고 볼 수 있는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는 10월 1일, 전국 초중고생의 인권·생활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학생인권에 대한 확장된 관심이 과연 실질적 변화로 이어졌을까. 조사 결과는 학교의 음울한 자화상이 여전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학생 위에 군림하는 학교, 학생을 차별하는 학교, 학생을 찍어누르고 내모는 학교, 변화에 대한 기대를 체념하도록 만드는 학교, '부당함/지루함을 견디는 능력'을 학습시키는 학교, '교육'과 '학교' 사이의 간극은 더욱 벌어져,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학교가 감옥처럼 느껴진다,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 학교에 있으면 숨이 막힌다고 답했다. 인권침해가 있어도 '어차피 해결되지 않을 테니 못 본 척한다'는 대답이 압도적인 현실 앞에서 우리 사회 인권과 민주주의의 암울한 미래가 점쳐진다.

그럼에도 이번 조사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중인 지역과 미시행 지역의 차이가 처음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은 뜻깊다. 조례가 시행된 지역의 학생이, 일반학교에 비해 혁신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인권침해를 덜 경험하고 학교생활이나 교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었다. 학교에 있으면 숨이 막힌다고 답한 학생의 비율도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아래로부터의 운동과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이 만나 학생의 삶의 질을 가르는 지렛대 구실을 했음을 볼 수 있었다. 교문을 넘은 인권의 물줄기는 더 세차게 흘러야 한다.

알바도 노동자다! 첫 단체협약

알바연대는 알바로 대표되는 불안정노동자들이 자신의 삶과 노동환경을 바꿔내기 위한 조직이다. 알바가 잠깐의 용돈벌이라는 것은 옛말이다. 알바 노동자도 임금으로 자신의 생계를 꾸릴 수 있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알바연대는 출범식(1.2) 이후 '최저임금 1만원!'을 주요요구로 내걸고 활동 중이다. 알바노동자나 고용주를 위한 노동법 교육은 물론 각 지역별 간담회를 통해 지역지회를 꾸리고 있다. 노조설립 승인(8.7)이 이뤄진 이후 본격적인 단체교섭도 진행 중이다. 법에 명시된 권리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주)레드아이로부터 부당하게 해고통지를 받은 알바 노동자와 함께 알바연대는 부당해고 철회를 비롯한 법정수당, 휴게시간 등 노동법 준수를 촉구, 이를 골자로 한 기본협약안을 체결(10.2)했다.

지금까지 알바 개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문제가 사회의 문제임을 확인한 것인 동시에, 노동자로서 대우를 받지 못했던 알바 또한 노동자임을 사회적으로 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용산 진압 김석기, 한국공항공사 낙하산 사장 임명

박근혜 정권이 용산참사(2009.1.20) 살인진압 책임자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을 공기업인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낙하산 임명하였다. 김석기 임명 강행은 “국민 대통합”을 말하던 박근혜 정부가, 국민 분열의 극단이었던 이명박 정부를 계승하고, “용산참사 계승”을 선언하는 것이다. 김석기의 임명은 용산에 이어, 쌍용, 강정, 밀양 등 삶을 지키고자 곳곳에서 저항하는 이들에 대한 폭압을 경고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에 공항공사 앞 출근저지투쟁, 김석기 퇴진 촉구 1만인 선언운동 등이 진행되고 있다.



△김석기 사퇴 촉구 농성 현장

인권단체연석회의의 100차 정기회의

2004년 첫 발을 내딛은 인권단체연석회의의 정기회의가 100차를 맞았다. 인권운동진영의 자리를 만들어온 인권회의는 한국사회의 변화 속에서 더욱 넓고 깊은 연대를 촉진하기 위해 운영 개편을 시도했다. 새로운 연대의 약속을 다진 인권회의는 조금 더 즐겁고 조금 덜 무겁게,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소통하기 위한 촉진 모임으로 새 시작을 열어가고 있다.

남산인권술큐콘서트, 시민들의 힘으로 개최

남산인권술큐콘서트는 국가안보라는 미명하에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해 온 중앙정보부와 안전기획부가 있었던 역사적 현장인 남산 안기부 터를 인권과 평화 그리고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2012년 봄부터 재단법인 인권재단 사람이 추진하고 있는 캠페인의 하나다.

제3회 남산인권술큐콘서트 "남산, 기억의 상자"가 준비되던 당시,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이 자행한 반민주적 선거부정과 불법적 선거개입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국민적 규탄이 폭발하기 시작했다. 범국민적 열기가 번져가는 것을 두려워해서인지, 지원을 약속했던 서울시가 콘서트 홍보문구의 내용이 '정치적'이라는 이유를 달아 지원을 철회했다. 행사진행이 어렵게 되었지만, 이러한 소식을 접한 많은 시민들의 후원과 참여로 제3회 남산인권술큐콘서트(10.11)가 무사히 치러졌다. 남산인권술큐콘서트의 취지를 정치적 활동으로 판단하고 있는 서울시의 결정이야말로 매우 '정치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빈민이 아니라 빈곤을 철폐하자

2013년 9월 9일, 신부전증을 앓던 부산의 한 기초생활수급자가 빈개탄을 피우고 생을 마감했다. 그의 딸이 취직했다는 이유로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한 수급탈락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제 막 직장생활을 시작한 딸에게 한 달에 백만원의 병원비를 의지하느니 목숨을 끊겠다는 것, 그것이 가난한 아버지의 마지막 선택이었다. 빈곤층은 늘어만 가고 빈부 격차는 커져가지만 우리 사회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애꿎은 빈곤층은 자꾸만 죽어간다. 그래서 10월 17일 빈곤철폐의날을 맞아 '빈민이 아니라 빈곤을 철폐하자'는 기조를 담은 '빈곤장례식'을 진행했다. 가난한 이들이 죽지 않기 위해 '가난'이 사라지는 세상, 꼭 만들어야 한다.



△가난 때문에 죽어간 이들을 추모하며 빈곤철폐의 날 투쟁대회 및 빈곤장례식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분회 투쟁 300일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지난해 콜센터 상담원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42명을 해고(2012.12.28)했다.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불과 이틀 앞두고 일어난 일방적인 해고였다. 이후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해고작 복직 투쟁을 이어온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 300일을 맞았다.(10.23)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내걸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공약의 대상기관이다. 그러나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비정규직을 줄이겠다는 공약을,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비정규직 대량 해고라는 경악할만한 꼼수로 대체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약의 실체가 투쟁 중인 세 명의 노동자에 의해 낱알이 드러나고 있다.

모습 통보,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전교조의 규약을 문제 삼아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노조 설립 취소를 공식 통보(10.24)했다. 고용노동부는 10월 23일까지 시한을 두고 노조의 규약을 수정하라고 통보했지만, 전교조는 '해고자의 조합원 인정 여부는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정부의 간섭에 항의, 명령을 거부해 왔다. 전교조는 앞서 조합원 총투표(10.16~18)를 거쳐 해직 조합원을 배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부의 노조 설립취소 통보는 학부모, 시민, 노동사회 각계에서 큰 저항의 목소리를 불러 일으켰다. 국제노동기구(ILO)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해직자 조합원 자격 인정)를 무시한 정부의 전교조 탄압에 대해 각계 기자회견과 선언, 서명, 농성이 뒤를 이었다. 전교조가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 들여(11.13), 일단 전교조는 법외노조 관련 소송의 1심판결까지는 합법적인 노조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단결할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

1차 하청을 넘어 전체 비정규직의 싸움으로, KD 투쟁

KD공장은 완성차의 부품을 포장하는 일을 하는 공정이다. 화성공장에서는 정규직 70여명, 비정규직 130여명의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회사가 KD센터 부지를 신형 엔진공장으로 바꾸기 위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의 KD센터 업무는 외주화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KD노동자들의 투쟁이 시작되었다. 조를 나눠 천막농성을 지켰고, 사측과 KD외주화를 용인하는 세력들의 유언비어와 비난이 담긴 문자가 전공장에 돌아도 흔들리지 않았다. 공장 안 연대 대오는 소수였지만 조합원들은 패배의식을 뚫고 완강한 투쟁을 전개했다. 천막농성 58일, 민중광장 옥상농성 25일차 끝에 회의록을 작성(10.30)했다.

이 투쟁은 1차 하청 조합원에 한정된 고용보장을 넘어, 비정규직 내의 비정규직인 계약직 노동자, 함께 일하지만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지 못한 노동자들과 함께 한 싸움이었기에 의미가 있다.

“삼성서비스 다니며 너무 힘들었어요.”

"저 최종범이, 그동안 삼성서비스 다니며 너무 힘들었어요. 배고파 못 살았고 다들 너무 힘들어서 옆에서 보는 것도 힘들었어요." 삼성전자서비스 두정점에서 일하던 최종범 열사가 10월 30일 오후 10시 19분경 천안분회 단체메시지 방에 남긴 메시지다. "그래서 전 전태일 넘처럼 그렇진 못해도 전 선택했어요. 부디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긴 최종범 열사는 31일 써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그는 삼성이 만들어놓은 위장도급과 건당수수료라는 굴레 속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노조를 통해 삶의 희망을 찾고자 발버둥 쳤지만 삼성의 잔인한 보복 앞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만 했다. 삼성전자서비스 최종범열사 대책위원회와 유족들은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노숙투쟁을 벌이고 있다. 응답하지 않는 삼성의 오만함 앞에 열사의 시신은 30일 넘게 차디찬 냉동고에 갇혀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전국서 모여 삼성 본사로 행진 ©미디어총정

아직도 불심검문? 홈리스들에게는 여전히 일상

인권단체들이 대대적으로 불심검문 반대활동을 펼쳐 국가로부터 배상금을 받은 지도 벌써 십 수 년이 흘렀다. 그 뒤에도 강력범죄 소식이 전해질 때면 간간히 경찰은 불심검문을 강화하겠다는 발표를 했지만, 거부할 권리를 당당히 행사하는 시민들에게 경찰은 적극적으로 불심검문을 집행하지 못했다. 그런데 홈리스들에게는 예나 지금이나 경찰의 집중적인 불심검문이 일상이다. 심지어 교회에서 홈리스들에게 구제금을 나눠주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적게 하고 그 옆에서 전자단말기로 경찰이 신분을 조회하는 일이 있었다.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한 홈리스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었다. 경찰의 홈리스 불법 불심검문에 항의하는 기자회견(10.31)을 시작으로 법에 보장된 권리를 현실화하기 위한 행동을 시작하였다.



△홈리스 표적 불심검문 중단! 피해자 문제 해결!

개항 이래 첫 파업, 인천공항 비정규직

인천공항은 공항서비스평가 시상식에서 8년 연속(2005~2012) 세계 1위 공항에 등극했다. 전 세계 1,700여개 공항 중 서비스평가 8연패를 달성한 공항은 인천공항이 유일하다. 하지만 이러한 명성의 이면에는 수 천명에 달하는 비정규노동자의 눈물이 숨어 있다. 인천공항의 간접고용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87%에 달하는 6천여 명에 이른다, 간접고용 돼 있는 이들 비정규직노동자는 업체가 바뀔 때마다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임금과 노동조건이 저하되는 악순환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고용 안정, 임금 인상, 인력 충원, 노조활동 보장과 정규직화를 위한 대화 등 인천공항 측에 '성실한 교섭'을 요구하며 11월 1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인천공항 개항 이래 비정규직 첫 파업을 실시하였다.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안정, 임금인상, 노조활동 보장, 교대제 개편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

해외 한국 성소수자 그리스도인 선언 발표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교회협의회 10차 총회를 맞이하며 해외 한국의 성소수자들이 11월 2~3일 양일간 모여 서로의 상황을 공유하고 동성애 혐오와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하는 선언을 발표하였다. 교회가 성소수자 혐오를 주도하는 세력이 되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전세계에서 모인 지지의 목소리는 큰 힘이 되었다.



△ 광화문광장에 함께 모인 해외 한국 성소수자들

박근혜, 초국적 자본에 공공부문을 팔아버려 걱정당한 날

후보시절 ‘국민과 합의없는 철도민영화는 추진하지 않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말을 바꿔 철도민영화를 비롯한 각종 공공부문 민영화에 박차를 가했다. 얼마 전 프랑스 경제인 간담회(11.4)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유창한 프랑스어로 공공시장 개방을 약속하고 대통령 시행령 개정을 언급했다. 그리고 귀국 후 외국 기업들이 철도시설의 감독 및 경영 조달계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정부 조달협정을 개정해 국무회의에서 기습 처리를 강행하였다. 철도민영화의 빛장이 풀렸다는 많은 이들이 분노하는 순간이었다.

철도는 국민의 발이다. 수익성을 중심으로 한 민간기업의 철도 운영은 요금인상, 안전위협, 적자선 폐지, 노약자를 위한 할인제도 축소 등을 야기할 것이다. 국민의 보편적인 이동권을 침해하는 철도민영화!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철도를 누려야 할 우리들의 권리가 희미해지고 있다. 12월 9일로 예정된 철도노조의 파업과 더불어 폭넓은 민영화 저지 투쟁이 필요한 때다.

카페'그' 다시시작 기념식

'존중, 사랑, 평화'의 가치를 담아 열었던(2010.8.30) 카페 '그'는 영업 시작 8개월 만에 재건축을 이유로 퇴거명령을 받았다. 임대인이 '돈 좀 더 벌여볼까' 하는 마음만 먹으면 임차인의 삶은 만신창이가 되어버린다. 법과 제도가 철저히 건물주의 편이기 때문이다. 거리로 쫓겨날 수 없는 카페'그'는 법의 테두리 밖에서 싸우기로 했다. 전 재산을 투자하고 빚을 내어 차린 가게에 걸려 있는 운영자의 생계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 의미를 품게 된 공간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법원은 11월 4일 이후 언제든지 카페'그'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건물주에게 주었다. 11월 5일 카페'그' 다시시작 기념식을 기점으로 밤낮으로 카페를 지키기로 했다. 멀리서 모여든 마음들이 질문한다. '돈 좀 더 벌여보겠다'라는 욕심이 재산권이라는 이름으로 보장받는 사회에서 "진정한 권리는 무엇인가." 카페'그'의 싸움은 우장창창 등과 더불어 상가세입자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카페'그'를 지키는 사람들

3년간 은둔된 목소리, 에이즈환자 요양사업에 대한 증언

HIV감염인들이 국가에서 지정한 '에이즈환자들이 갈 수 있는 유일한 요양병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세상에 알렸다. 2010년부터 국가에이즈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중증/정신질환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을 위탁해온 수도권세요양병원에서 에이즈 환자들은 그곳이 병원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할 정도의 참담한 대우를 받았다. 적절한 의료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에이즈 환자에 대한 차별과 징벌, 감시 및 프라이버시 침해, 간병인 노동력 착취 등이 일상적으로 벌어졌다. HIV감염인인 간병인과 '에이즈'환자는 "해주는 것 없이 환자를 늑혀놓기만 하면서 한 달에 200만 원이 넘는 진료비를 챙기는" 병원을 보고 화가 났지만 '유일한' 요양병원이라서 참아야 했다. '에이즈'환자에게 배제와 차별,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는 동안 관리.감독기관인 질병관리본부는 묵인하였다. 질병관리본부의 무책임함과 HIV감염인에 대한 무시는 환자 사망, 차별과 인권침해를 정당화하는 효과를 낳았다.

3년간의 입막음은 무서운 것이었다. HIV감염인들이 입을 열고 대책을 촉구하자 질병관리본부는 11월 30일로 예정되어있던 세계에이즈의 날(12월 1일) 기념행사를 '에이즈관련 단체들의 피켓시위를 이유로 돌연 취소했다.

HIV감염인은 피해자이자 증인으로 나서서,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참담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에이즈환자를 존중하는 새로운 요양병원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노동인권 없는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권위 분회는 단체협약, 평등임금 쟁취와 인권위 바로 세우기를 요구하며 11월 6일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노조가 제시했던 단체협약은 인권위가 이제까지 공공기관이나 기업에 권고했던 내용 수준이었다. 그러나 인권위는 노조의 요구를 거부했다. 정리하고 요건에 있어서도 본인들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던 “긴박한 경영상의 해고”가 구체화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무시한 채 “근로기준법 24조에 정한 바를 따른다”는 법적 기준만 제시하였고, 업무준비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2011년 여성 감정노동자에 “폭언 상황이 발생할 때 다른 직원에게 고객 응대를 요청한 후 자리를 이동”하라고 권고한 바 있지만 하지만 실제 내부 상담직원이 욕설을 들을 경우, “그냥 전화 끊으면 되지 왜 그런 조항을 단협에 명시하나”는 이유로 합의를 거부하기도 하였다. 인권위가 말하는 ‘인권경영’은 인권위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었다.

공무원노조 서서 압수수색

검찰은 공무원노조 자유게시판에 외부인이 올린 3줄의 글을 핑계로 3차례에 걸쳐, 5만여 자료를 압수수색해갔다. 검찰이 제기한 혐의와 달리 대부분 대선과 무관한 자료였으며 아직까지 아무런 결과와 근거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대선 “관권부정선거에 대한 사회적 분노에 대한 물타기”로 진행된 것임을 짐작케 한다. 문제는 최근의 상황이 단순한 물타기가 아니라 직접적인 공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부정하게 권력을 쥔 박근혜는 민주주의, 사회적 저항세력의 뿌리를 뽑으려 하고 있다. 정체불명의 보수단체 고발로 10일만에 3차례의 압수수색을 실시할 만큼, 정권의 취약한 정통성을 완력으로 버티려고자하는 권력의 공포감이다. 신자유주의를 넘어 전체주의 권력의 재구성을 꾀하는 그들에 맞서기 위해 투쟁 외에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다.



△현 정국을 물타기 하려는 꼼수를 즉각 중단하고 공무원노조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폭언과 협박은 이제 그만! 서울여대 청소노동자들의 투쟁

"X년, 주둥이 나불댄다, 감히 (내가) 부소장인데 내 말을 거역해? 내 말 안 들으면 다 잘라." "취새끼같이 그리고... 일하기 싫으면 당장 나가, 들어오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섰어." 서울여자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이 학교측 용역업체의 소장·부소장으로부터 들었다는 폭언 중 일부다. 용역업체 관리자들은 노조에게 "노조 만 들지 말고 학교랑 협상을 해라, 노조를 탈퇴하는 게 영웅 되는 길"이라며 탈퇴를 종용하고, "오줌을 자주 싸니까 물을 마시지 말라"고 하는 등 성희롱적인 발언을 일삼았다. 또한 그는 장애인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다리를 저는 흥내를 내는 등 장애인 비하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폭언과 협박 등을 견디다 못한 청소노동자들은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 출범식(11.13)을 열었다. 서울여대는 문제가 커지자 사실여부와 무관하게 관리자를 교체하겠다고 밝혔으나 노조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죽음이 미담이 되는 이들, 우편진행배원

충남 공주의 한 우체국에서 비정규직 집배원으로 일하던 한 노동자가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으로 쓰러져 세상을 떠났다.(11.18) 사인은 심근경색이었다. 7새 뒤인 24일 경기도 용인시에선 배달 업무를 하다 오토바이 사고로 뇌사상태에 빠진 정규직 집배원 노동자가 숨을 거뒀다. 27일에는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진 충남 당진 한 우체국 창구 노동자가 숨졌다. 한달 사이 우정본부 소속 노동자 3명이 연달아 숨을 거둔 것이다.

집배원들의 노동시간은 연평균 2,952~3,216시간으로 OECD 회원국 연평균 노동시간의 2배다. 매달 청구서가 몰리는 '폭주기'와 명절·선거기간인 '특별기'에는 법정 주당 근무시간인 6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하는 시간이 길거나 물량이 많으면 사고가 많아지는 것이 당연하다. 고강도 노동으로 목숨을 잃는 것이 미담이 되는 이들. 더 이상의 죽음을 막아야 한다.

수치를 당할 자는 바로 그들이다

박창신 신부는 전북 군산시 수송동 성당에서 '불법 선거 규탄과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미사(11.22)를 봉헌하며 강론 말미에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사건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이로 인해 수많은 보수단체에서 규탄집회를 열었으며 언론과 정부, 여당은 너나 할 것 없이 연일 박창신 신부를 대역죄인마냥 몰아갔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계속되는 중복몰이의 완성판을 보는 듯 했다. 12월 4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부정선거 규탄과 대통령 사퇴를 주장한 전주교구 사제단의 요구를 존중하며 이를 사제단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창신 신부, 문규현 신부가 '불법 부정선거 규탄과 대통령 사퇴 촉구 시국미사'에 참여하기 위해 군산 수송동성당에 입장하고 있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탈핵·탈송전탑·탈방사능 기조의 한국 탈핵대회

2011년 후쿠시마가 던진 충격파는 2013년에 들어서야 비로소 한국 사회 자신의 이슈로 자리잡게 되었다. 일본처럼 혹은 더 철저하게 한국은 화석, 핵에너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생산지와 소비지를 분리하고, 또 이를 유지하기 위해 고속도로를 깔듯이 간편하게 고압송전망을 깔아왔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과 사업의 결정에는 이로 인해 고통받을 지역과 개인의 목소리가 배제되었고, 한 번 정해지면 되돌릴 수 없는 국책사업의 일방적이고 독점적인 방식이 관철되었다. 결과적으로 발전시설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주변지역 주민들의 삶은, 삶다운 삶으로부터는 물론이고 생명과 안전으로부터도 멀어져 왔다. 또한 이제 우리는 밀양 송전탑 문제를 계기로 그 송전망이 지나는 곳에서도 짓밟히는 생명과 인권을 확인하고 있다.

11월23일 탈핵대회는 후쿠시마의 기억이라는 타국 타인의 관점에서, 이제 이 땅의 방사능과 송전탑과 핵이 발생시키고 있는 인권과 생명권의 침해에 대해 스스로의 목소리를 냈다는 데서, 또한 이를 준비하고 참여한 주체 역시 기존 환경운동의 틀에서 확장되었다는 데서 작지 않은 의미를 가진다.

인권위가 창피해 트윗행동

인권위 창립 12주년을 맞아 인권위가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음을 현병철 위원장을 비롯한 무자격 인권위원들이 새겨 들으라는 취지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트윗행동이 펼쳐졌다.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은 11월 25일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 인권위가 그동안 외면해왔던 인권현안에 대한 인권활동가들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SNS 상에서 나누는 행동을 벌였다. 또한 11월 21일에는 장하나 의원실과 함께 인권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후보추천위원회를 두는 등 인선절차를 마련했으며 인권위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좋은 일자리?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

국내 10개 주요 그룹이 참가한 '2013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데서 알 수 있듯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시간제 일자리를 '선택'이 아니라 '강요'받는다. 현행 시간제 일자리는 전일제 업무를 파트타임으로 분산하는 것이기에 눈 가리고 아웅 이상의 고용정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박람회에서 모집하고 있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들은 대부분 단순서비스업무였기에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확산시키는 것은 질 낮은 저임금 알바 일자리임이 분명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돈벌이를 위한 일자리'가 아닌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일자리',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일자리'다.

HIV/AIDS 감염인들을 배제한 에이즈의 날

12월 1일은 세계 에이즈의 날이다. 감염인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고 편견을 지우는 캠페인을 열어야 할 이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후원하고 한국에이즈퇴치연맹이 주최하는 기념행사가 열릴 예정이었다. 그런데 행사를 이틀 앞둔 11월 28일 오후 한국에이즈퇴치연맹은 기념행사를 취소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에이즈관련 단체들의 피켓시위 등의 시민들의 안전문제가 대두"된다는 정부의 핑계는 감염인들의 목소리가 사라진 에이즈의 날을 HIV/AIDS 감염인 차별 철폐의 날로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되새기게 했다. 한편 성소수자 운동 진영 등은 이태원 클럽 액션에서 최즈의 날 기념 후원 파티(11.29)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11월 29일 열린 에이즈의 날 기념 후원 파티

죽음을 넘어 투쟁으로, 학교비정규직

8월 17일 충북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가 근무하던 학교에서 목을 매고 쓰러진 주검으로 발견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벼랑 끝에 선 노동자는 마지막 희망으로 청와대 국민신문고를 두드렸다. 하지만 마지막 외침은 끝내 외면당했다.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호봉간격 3만원 ▷정액급식비 13만원 ▷명절휴가비 기본급의 120% ▷상여금 기본급의 100% ▷맞춤형 복지비 공무원과 동일하게, 라는 요구안을 가지고 11월 29일 2차 상경파업 투쟁을 전개했다. 이후에도 전국적으로 릴레이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쌍용자동차 비정규직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승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쌍용자동차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으로 일했으며 구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입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정규직임을 인정하는 판결(11.29)을 했다. 법원은 사내하청업체로부터 해고 당하기 전에 이미 쌍용자동차의 정규직이 되었으므로 고용관계가 없는 사내하청업체의 해고처분은 당연히 효력이 없다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쌍용자동차는 승소한 4명의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를 정규직으로 복직시켜야 하며, 판결에 의해 정규직으로 인정된 시기부터 정규직에게 지급했던 임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임금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이 판결은 그동안 사내하청 비정규직에 대한 불법파견 인정 판결의 연장이라는 점에서, 쌍용차를 포함한 제조업 사내하청업체에서 불법파견으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요구가 정당한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

형제복지원, 우리들 마음이 사무처 꽃이 필 때까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모임'과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첫 모임을 가진 날(11.30)이다. 2012년 11월 <살아남은 아이>라는 책으로 형제복지원 사건이 알려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30여년 전 사건을 접한 사람들도 있지만 당시 문제는 박인근 원장 개인의 문제로만 접근되었고 그가 2년 6개월의 형을 받은 것으로 모든 것은 끝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실체는 뒤에 있었다. 1975년 박정희가 만든 '내무부훈령 410호-부랑인 등의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조치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지침'이 그것이다. 가난하고 장애가 있고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들은 간혀 지내도 마땅한 사람으로 분리, 취급당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시설과 복지'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던 야만의 역사를 청산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국가 정책의 이름으로 숨죽이고 억압당했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하는 것은 진실 규명의 시작일 것이다. 형제복지원 대책위가 공식 출범(11.22)하면서 시작을 선언했다. "모두에게 존엄과 자유"가 있음!

밀양 송전탑 싸움 8년, 희망버스 만나 모두의 싸움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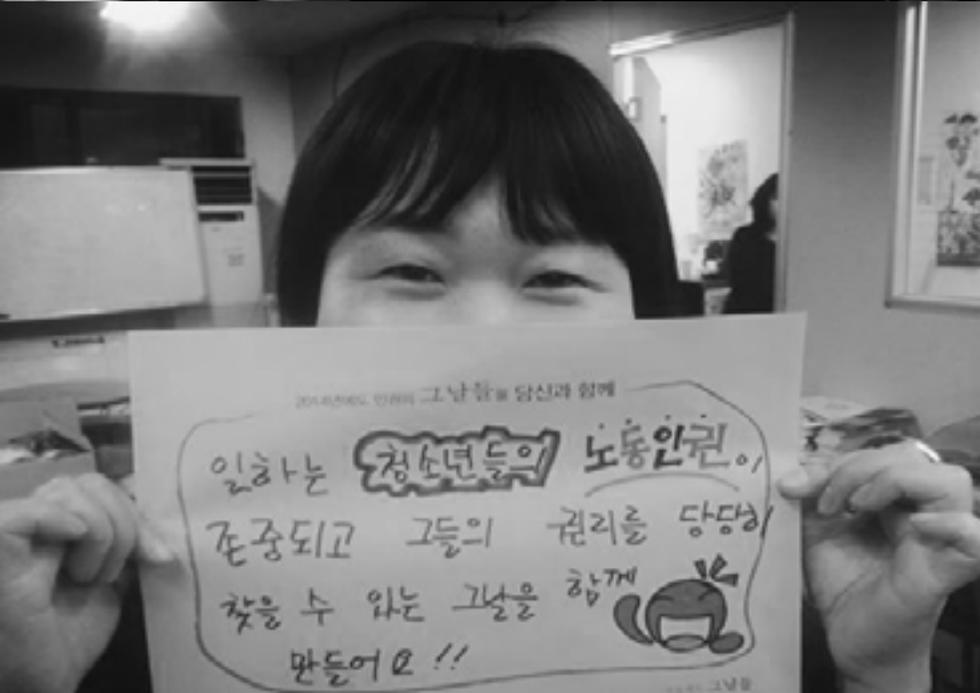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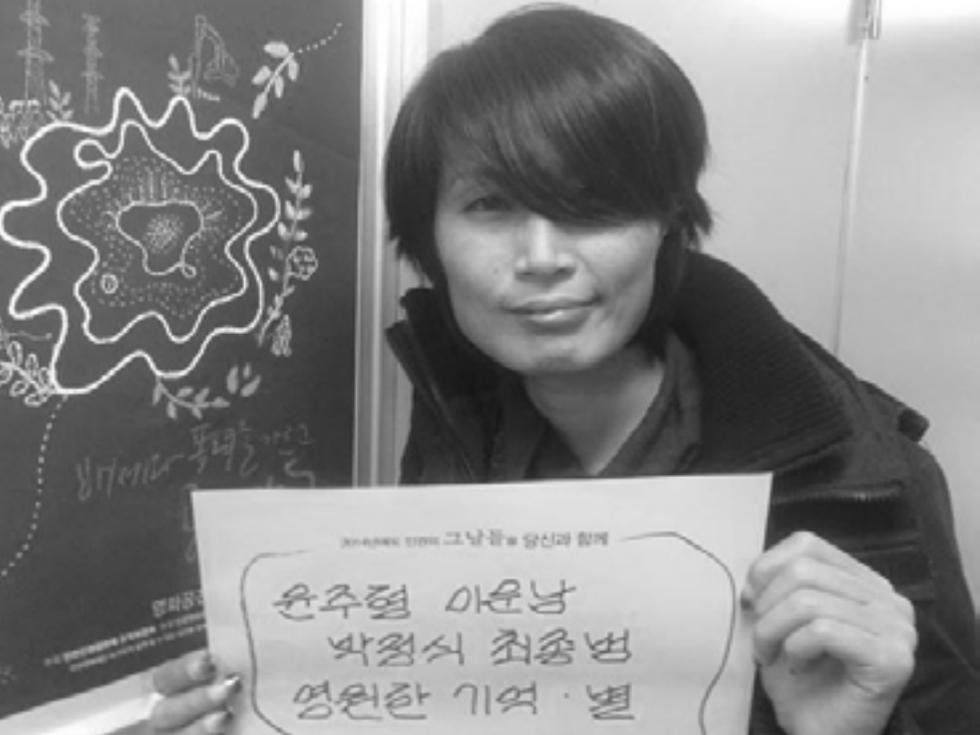
이치우 님의 분신(2012.1.16)으로 밀양 765kV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전국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전은 주민들의 주장을 묵살하며 공사 재개 방침을 공식화했고 공사를 강행(2013.5.20)했다. 밀양 주민들의 적극적인 저항으로 공사가 일시 중지(5.28)되었으나 경찰병력 3천 명이 투입(10.1)되면서 공사가 다시 시작(10.2)되었다. 밀양 주민들은 경찰에 의한 통행 제한, 불법 연행, 모욕과 멸시 등 날마다 인권침해를 겪으면서도 공사 중단의 의지를 꺾지 않았다. 공사를 막기 위해 매일같이 공사 현장을 향하는 밀양 주민들의 싸움에 함께 하자며, 고공농성을 했던 노동자들이 희망버스를 제안(11.5)했다. 이에 전국에서 출발하는 밀양 희망버스가 연대의 마음을 담아 밀양에 도착(11.30)했고, 1박 2일의 일정으로 주민들과 함께 했다. 신고리 핵발전소의 핵심 부품 불량으로 준공이 지연되었는데도 송전탑 공사를 강행하려는 한전과 정부에 맞서 송전탑 공사 현장에 희망을 세우고 강정, 쌍차, 용산 등 모든 억압받는 이들의 희망을 나누었던 밀양 희망버스로 밀양 주민들은 다시금 힘을 내고 있다.

밀양의 초고압 송전탑 건설 계획은 핵발전이 다양한 문제를 낳으며 인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다. 국가폭력에도 굴하지 않는 밀양 주민들의 용기는 우리 시대 인권의 현상이 어디인지 돌아보게 했고, 함께 살자고 맞잡은 손이 모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 방법임을 알려주었다.



2014년에도 인권의 그날들을

당신과 함께



2014년에도 인권의 그날들을 당신과 함께

레즈비언으로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날들을 위해!

투쟁!!!

2014년에도 인권의 그날들을

2014년에도 인권의 그날들을 당신과 함께

세상에
사랑으로 살라!
박근혜!

2014년에도 인권의 그날들을

2014년에도 인권의 그날들을 당신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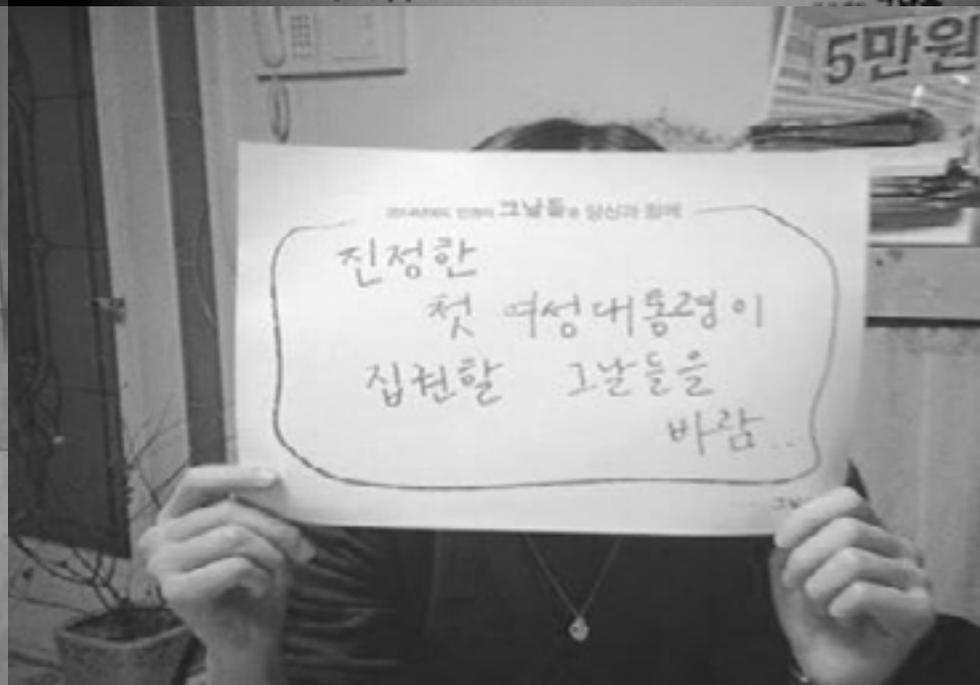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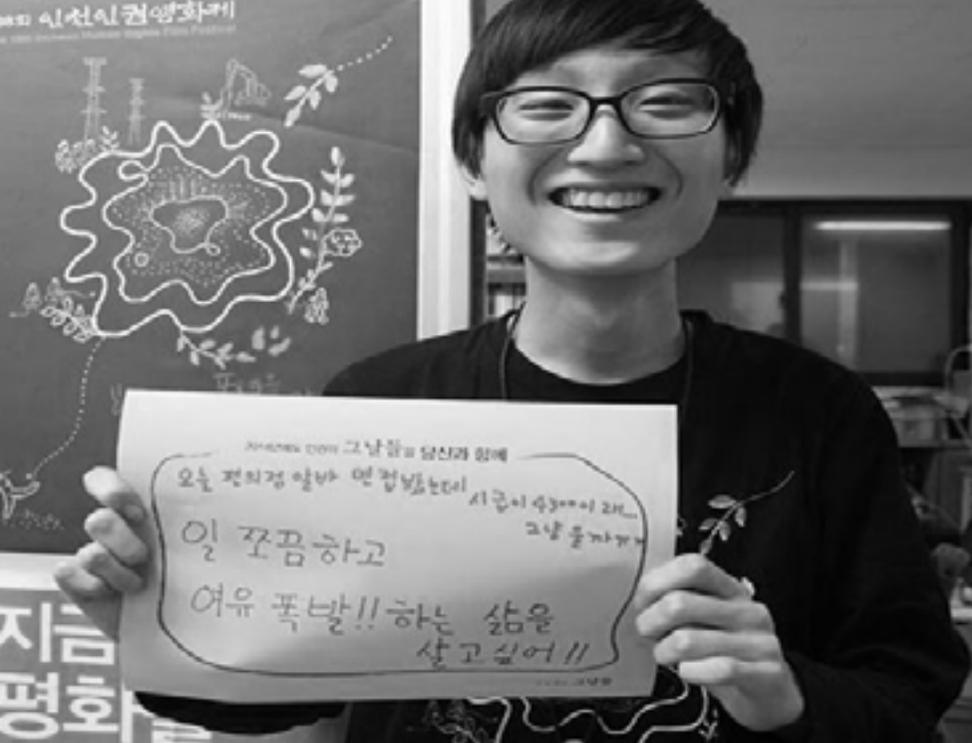
최저임금
1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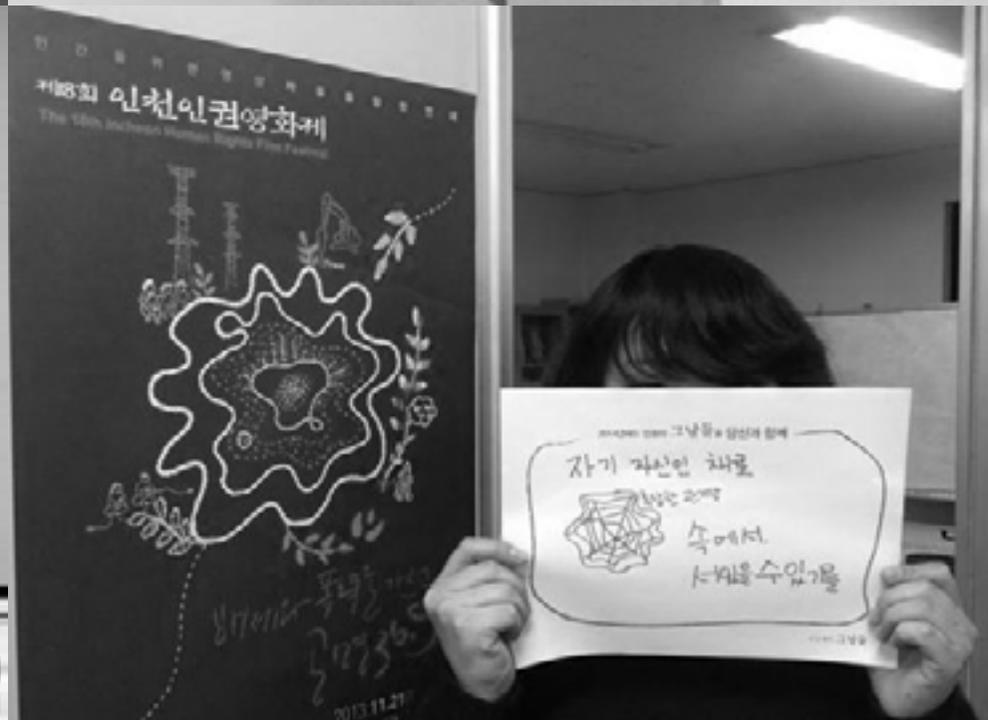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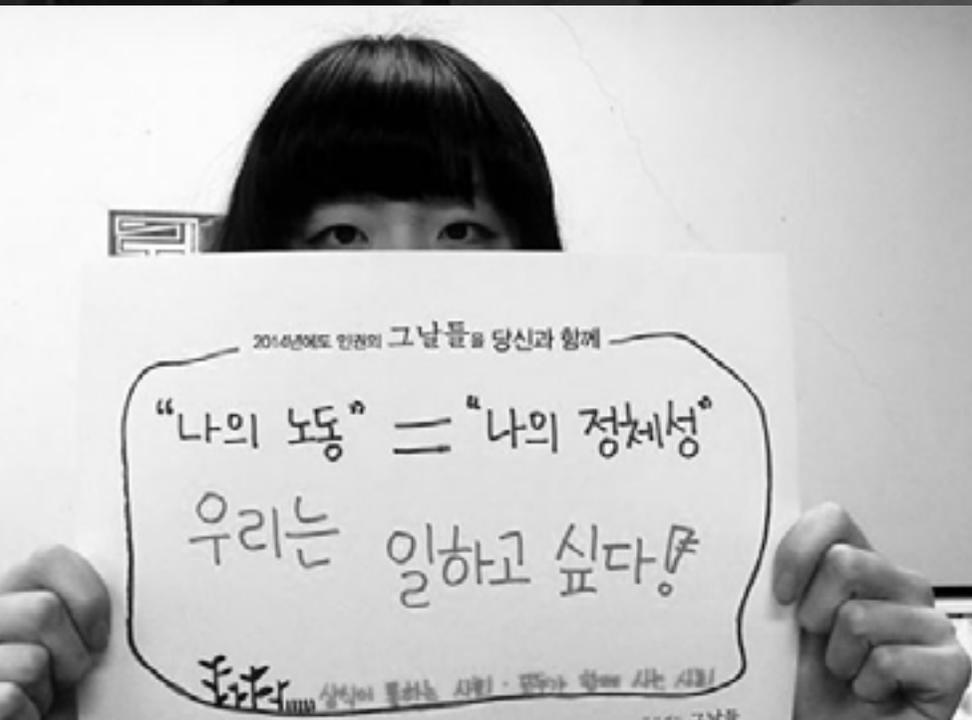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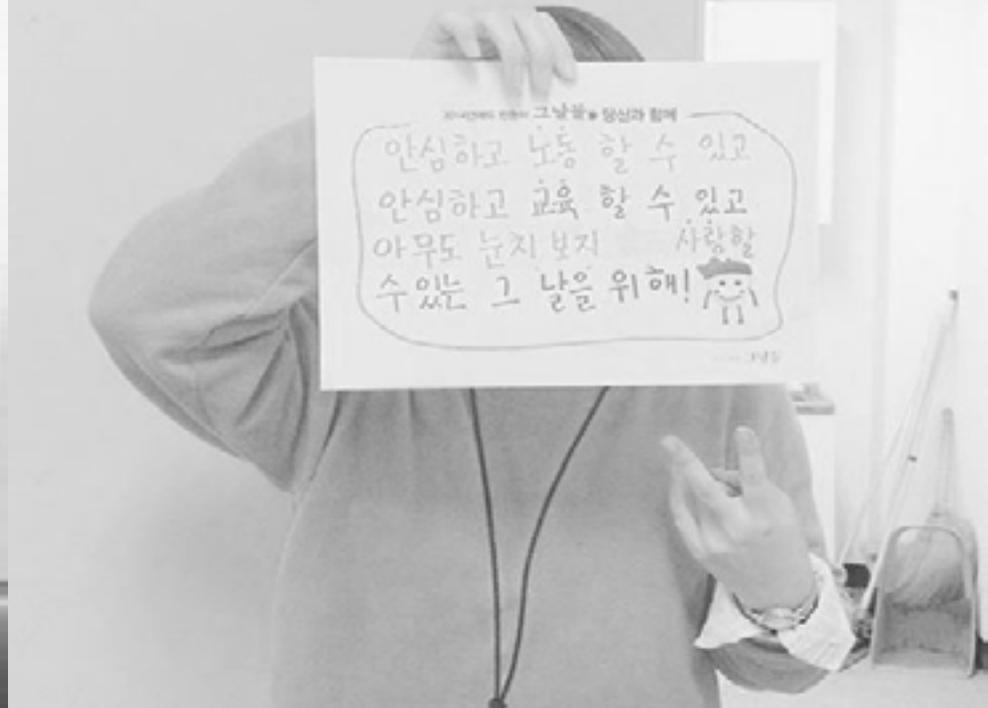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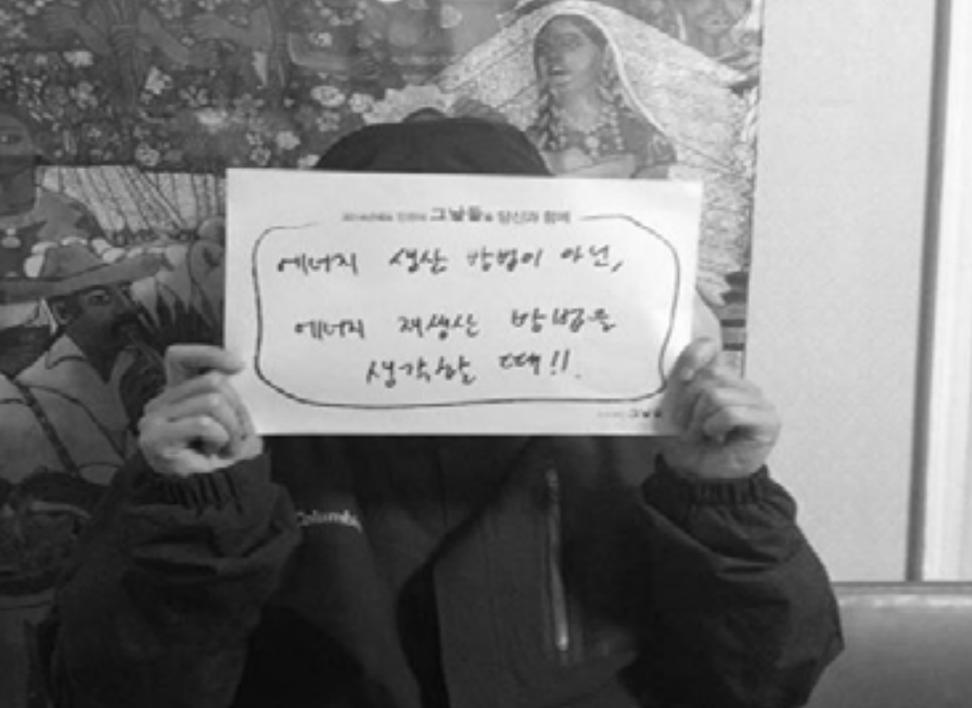
2014년에도 인권의 그날들을 당신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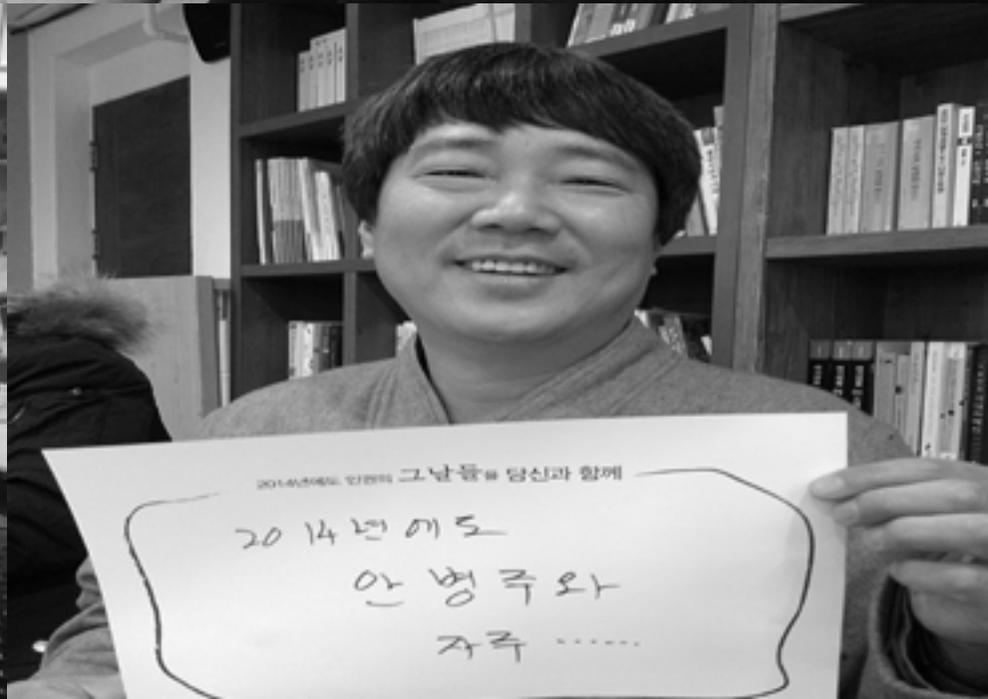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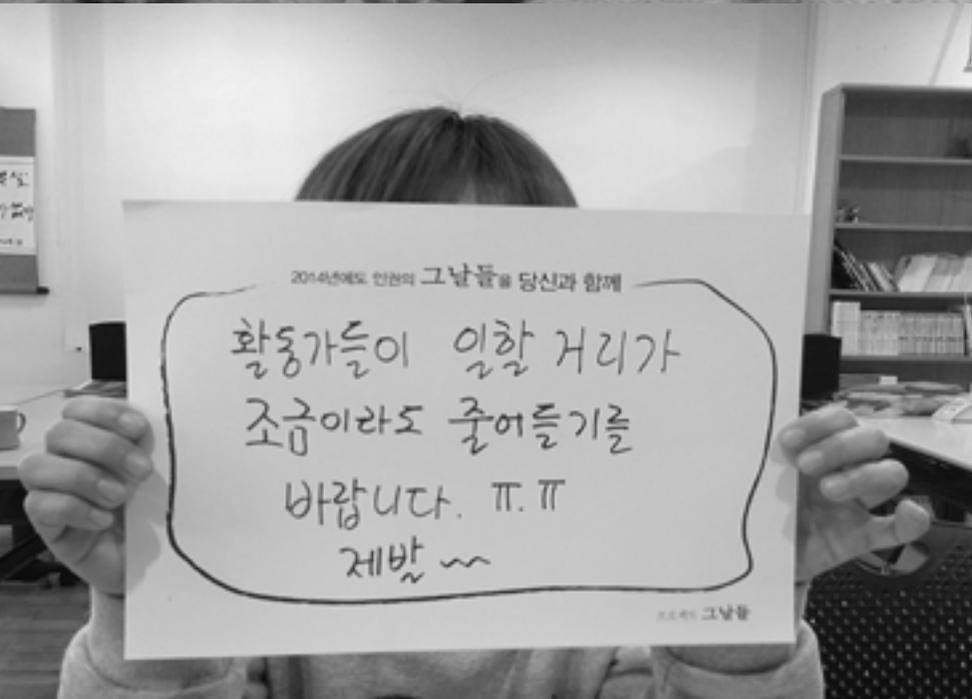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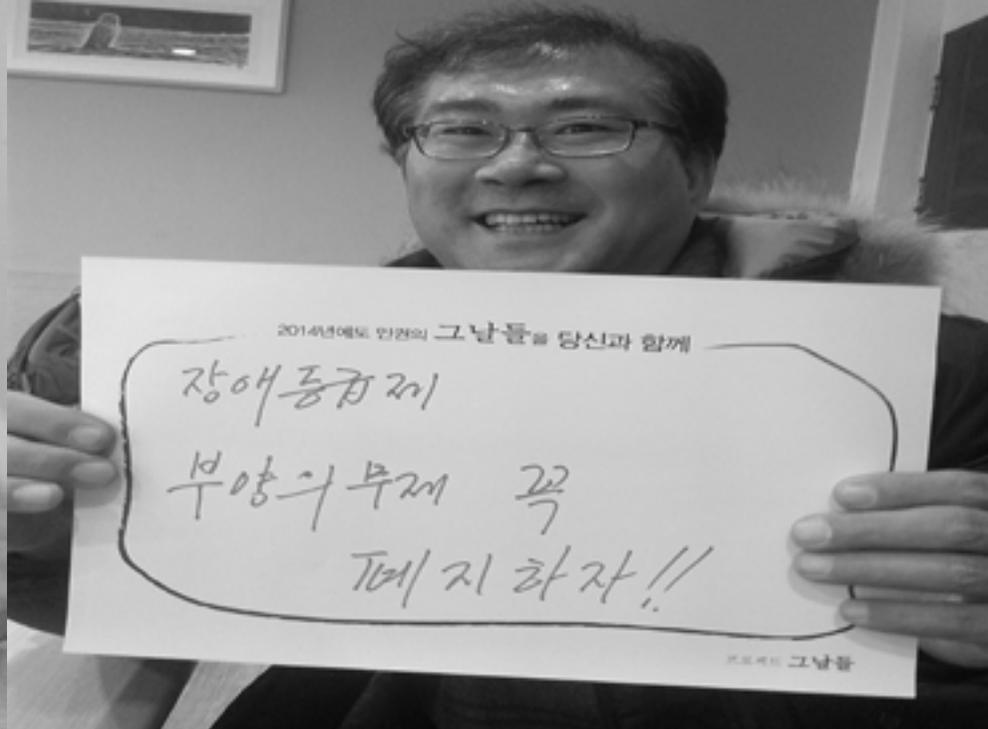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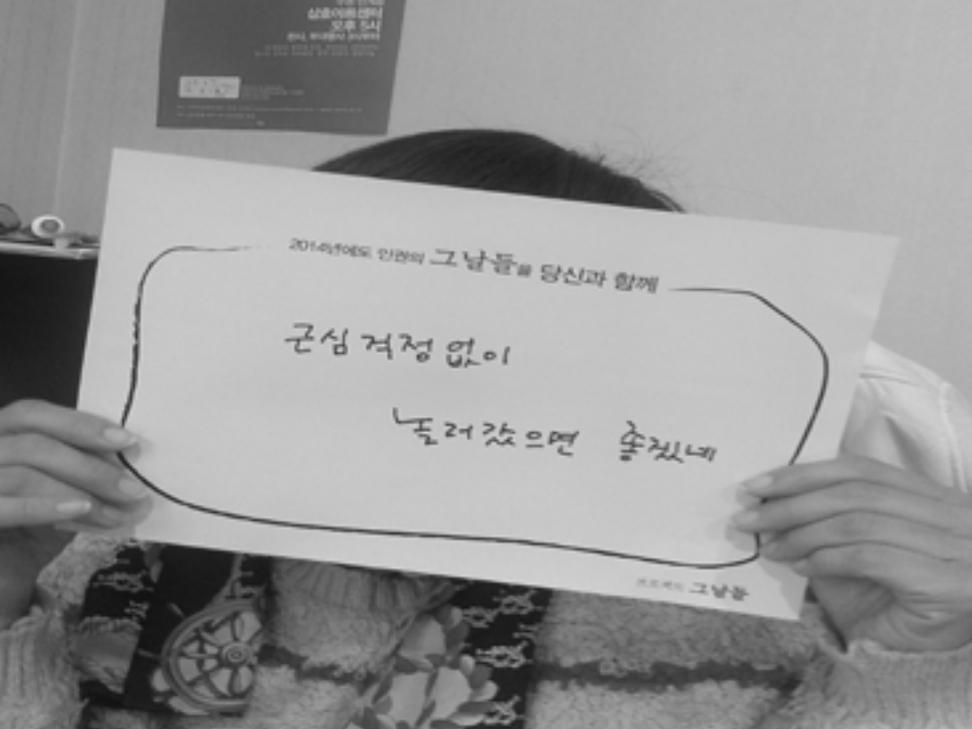
이 땅의 상흔이
그들 마음껏 흐르길
내도 같이 흐르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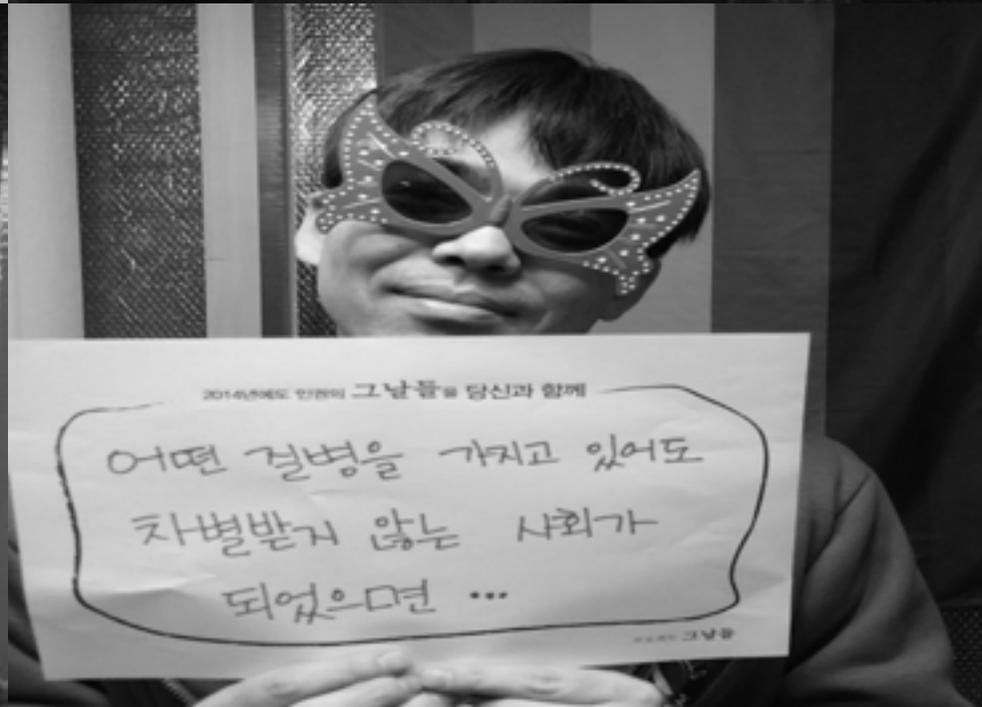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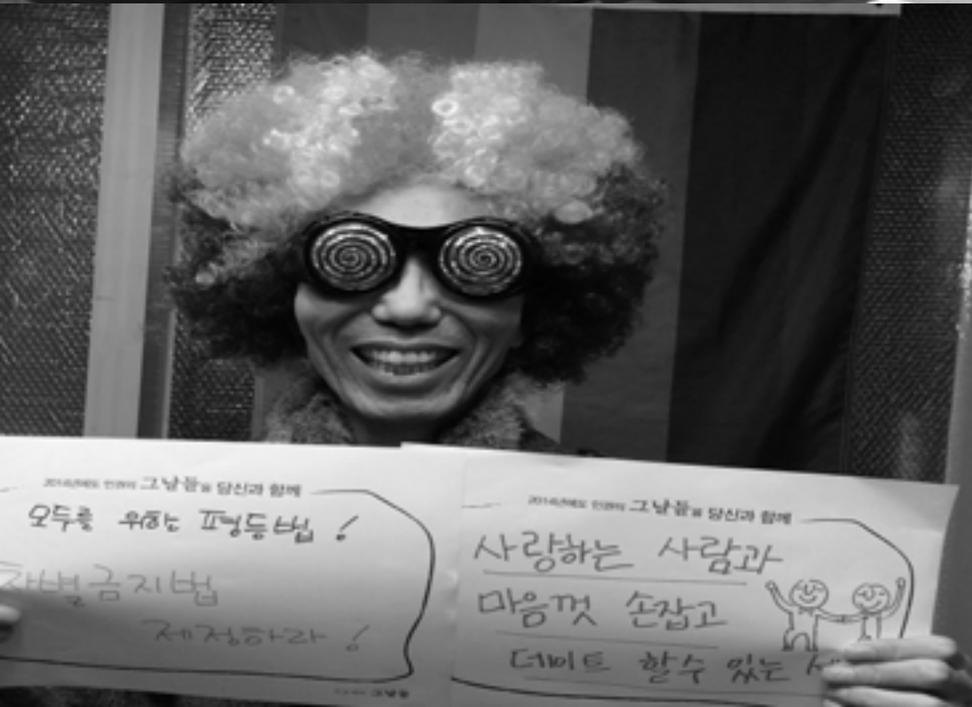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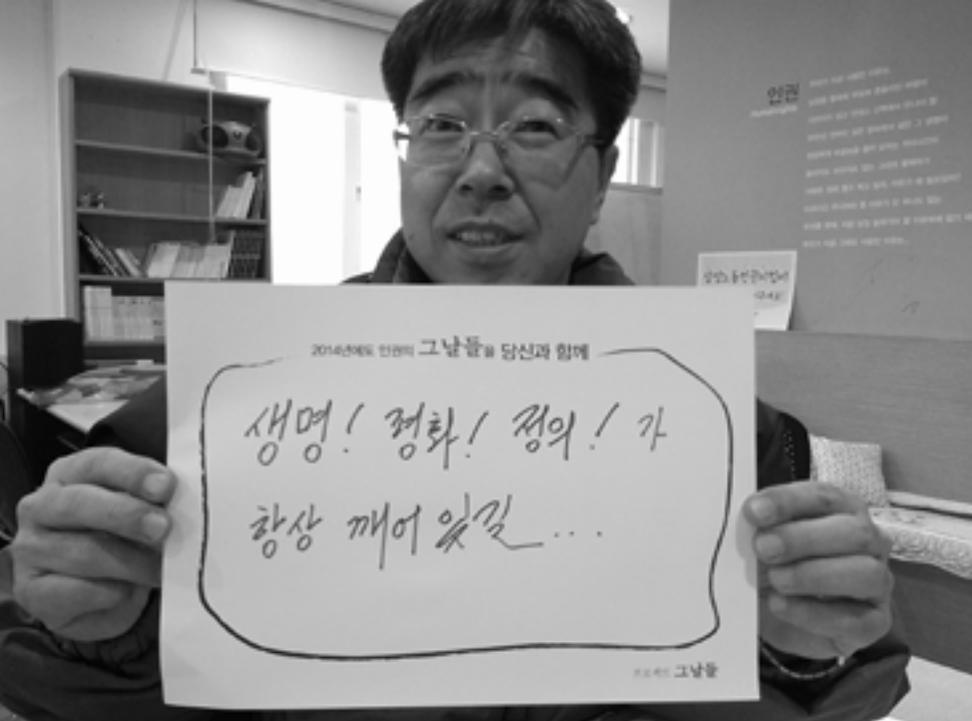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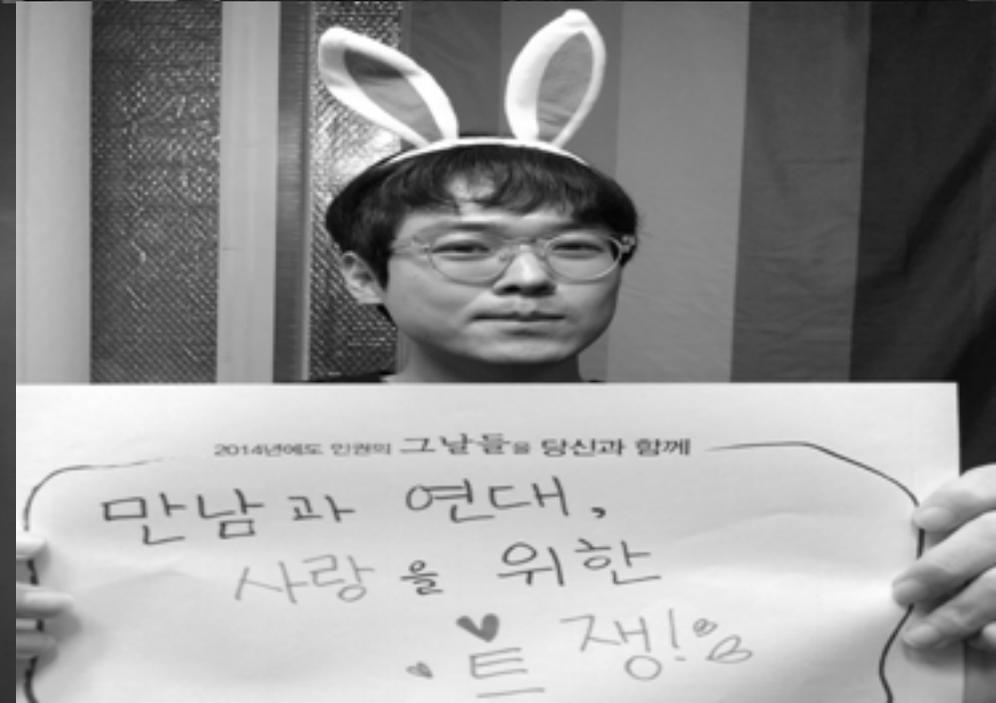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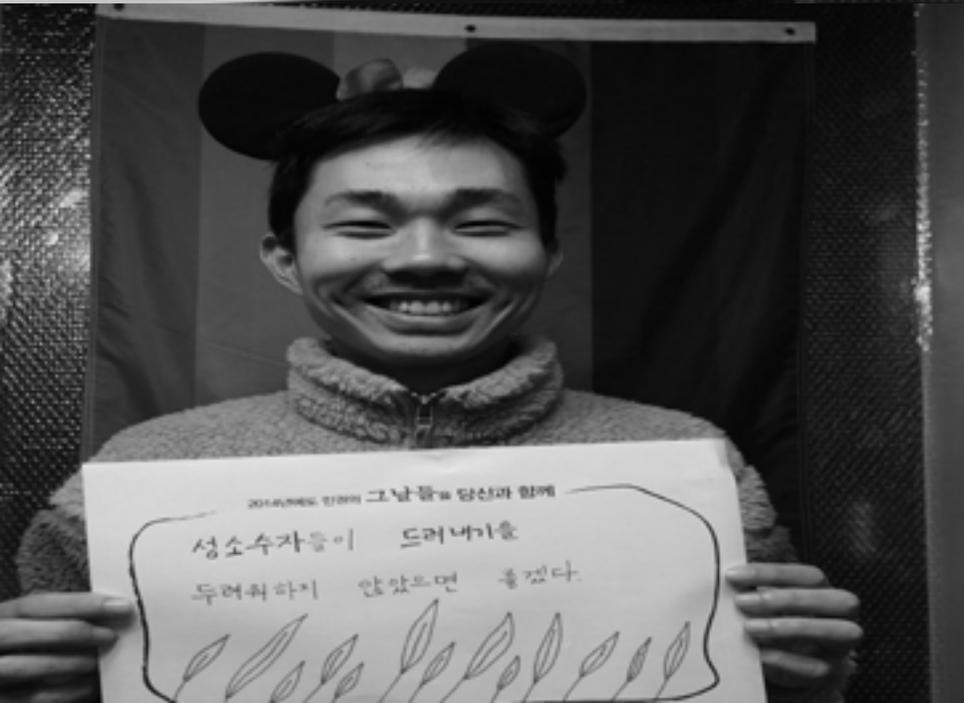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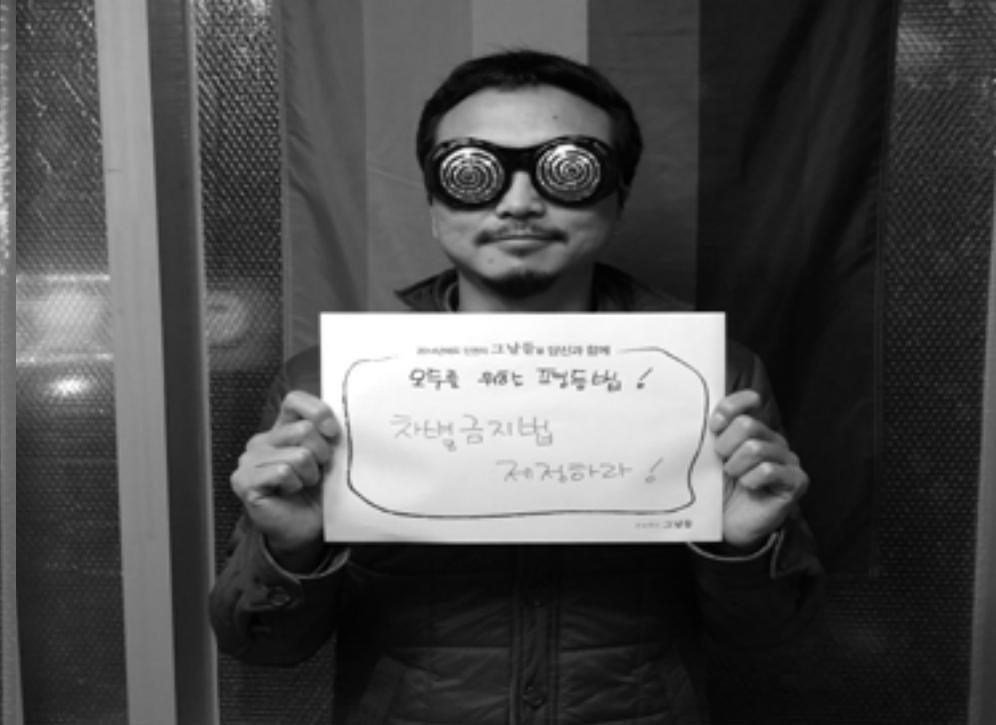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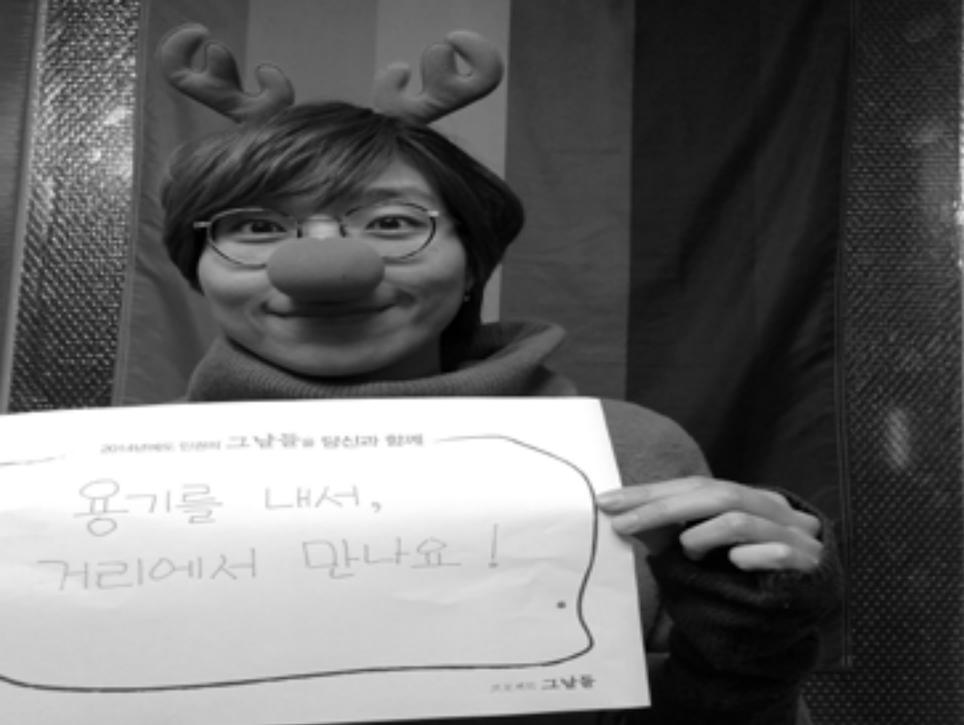
2014년에도 인권의 그날들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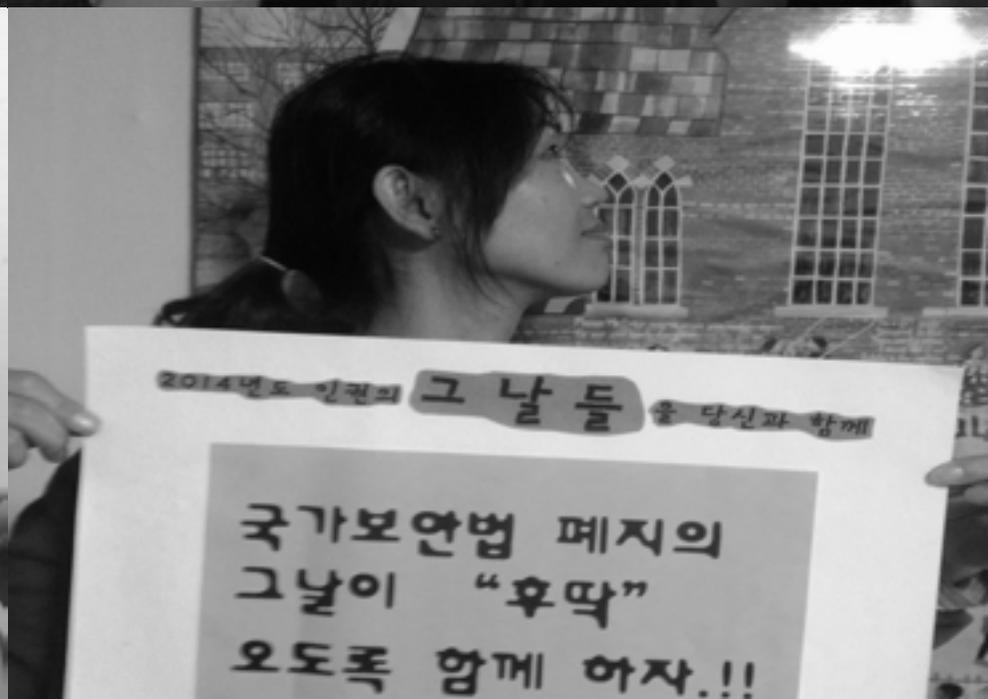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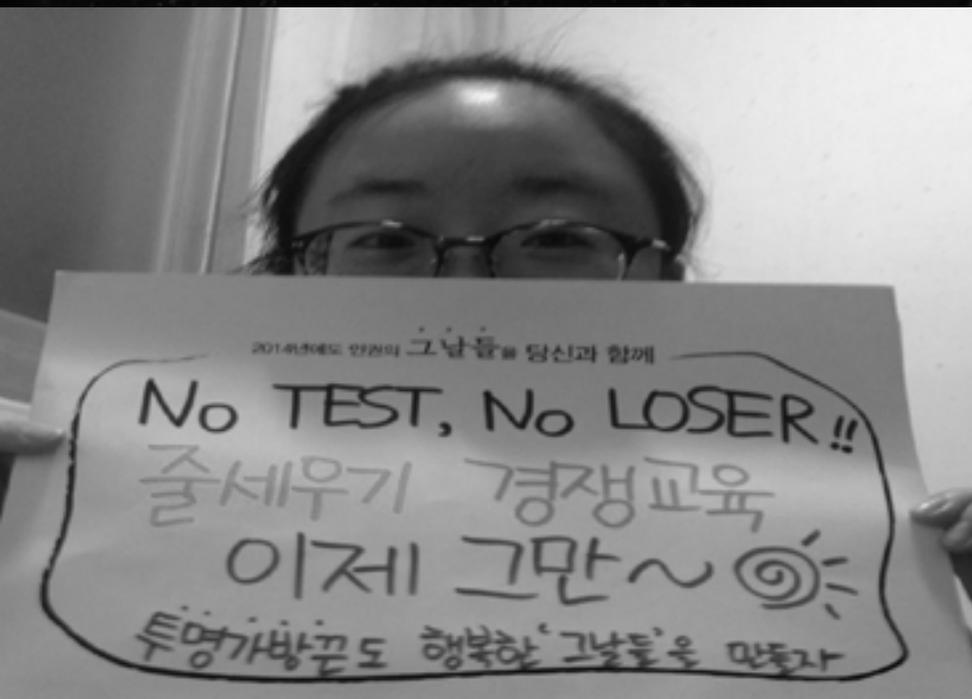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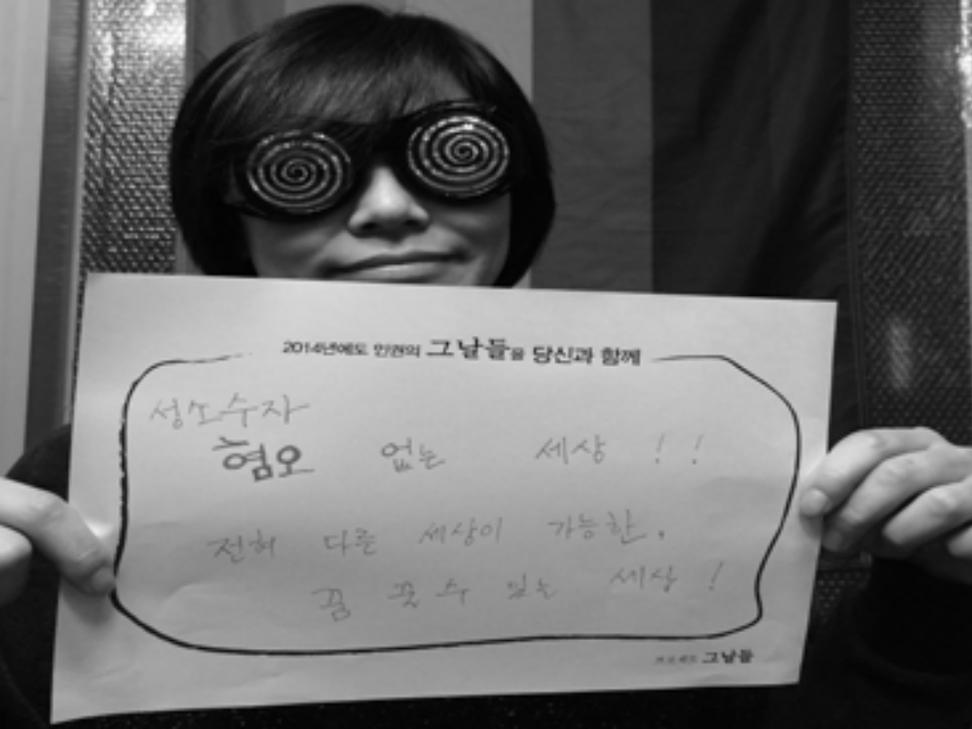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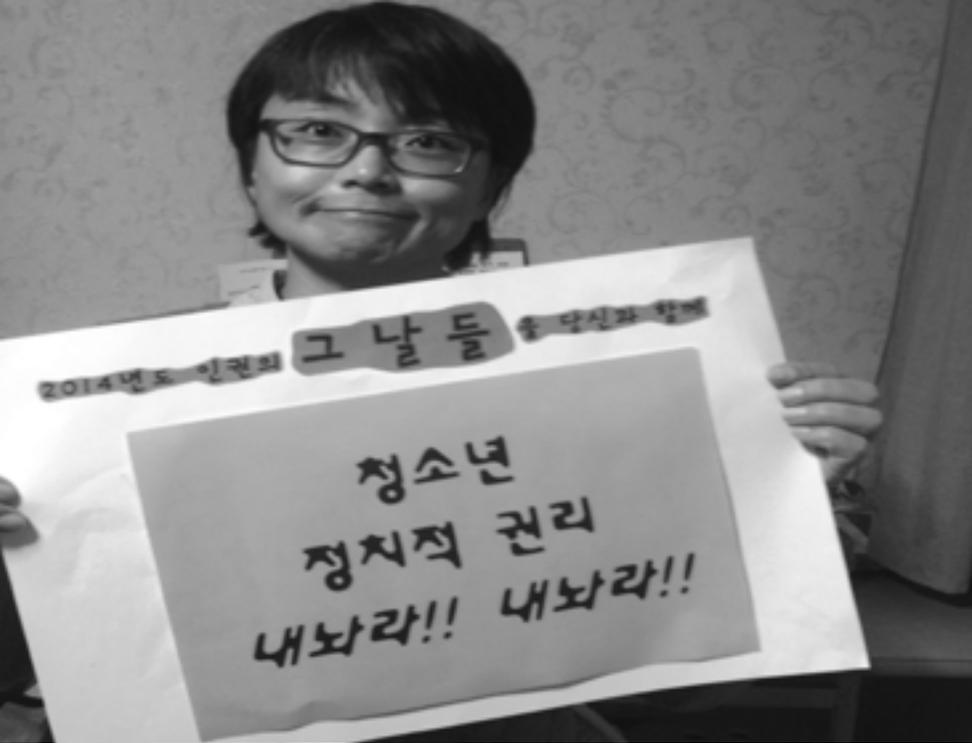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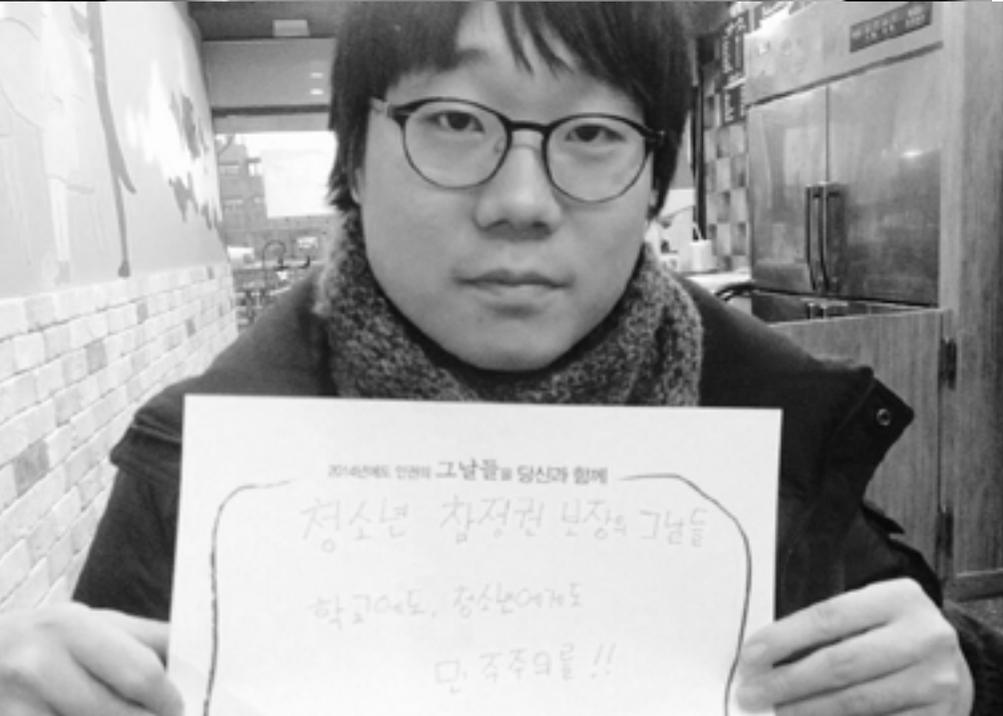












프로젝트 그날들

함께 만든 사람들

경계를 넘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국가인권위제차리찾기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금융공공성 쟁취 노조파괴 지지 골든브릿지 공동대책위원회, 녹색당 탈핵특별위원회,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빈곤사회연대,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법적책임연구회, 알바노조,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유엔인권옹호자 모임 한국NGO 모임, 이주노동조합 MTU,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 온다, 인권연구소 '장',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친화적학교+너머운동본부,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재단법인 인권재단사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강정마을,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집회시위 제대로 모임,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활동기상청 활기, 카페그, 골트콜렉티타노동자와 함께하는 공동행동,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함께살자농성촌주민들, 함께살자 희망지킴이, 해외 한국 성소수자 그리스도인 만남 준비단,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휴리스행동,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